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회관련 기사모음집 Ⅳ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정보자료실
CPb1.42.4

자료활용
인권정보자료실
CPb1.42.4

위원회 관련 기사모음집 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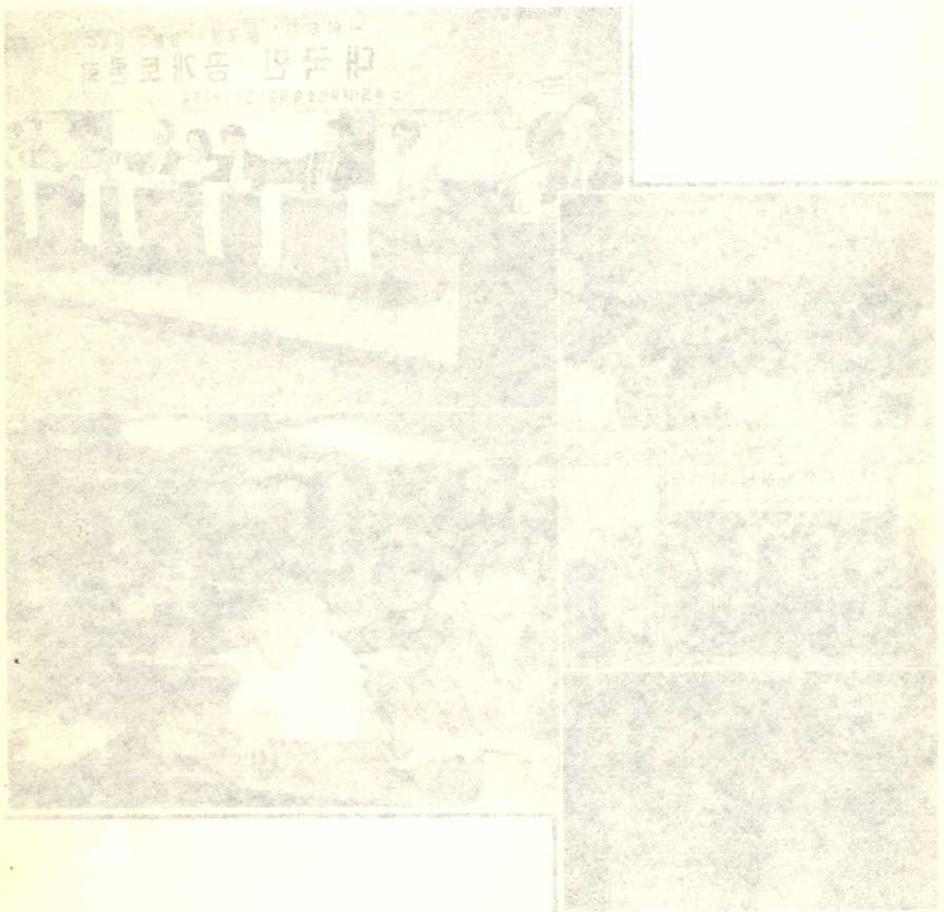
2001년 10월 ~ 2002년 5월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회 관련 기사모음집Ⅳ

2001년 10월 ~ 2002년 5월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차 례

1. 임기윤 사건 관련 보도

임기윤씨 사망 공권력 개입 (YTN 2001. 9. 28)
임기윤목사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 인정 (연합뉴스 2001. 9. 28)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관련 임기윤목사 공권력 탓 사망" (동아일보 2001. 9. 29)
80년 보안사서 사망 임기윤씨 의문사 인정 (중앙일보 2001. 9. 29)

2. 공개토론회 관련보도

공개토론회 개최 (동아일보 2002. 5. 20)
의문사 진상규명위 공개토론회, 국가기관 비협조로 진상규명 어려워 (노동일보 2002. 5. 24)
의문사위 토론회 공방 (조선일보 2002. 5. 24)
의문사진상규명위 대국민 토론회 (연합뉴스 2002. 5. 23)
조롱당하는 직속기관 (한겨레 2002. 5. 25)

3. 양산석 사건관련 보도

양상석씨 검시사건부 사라져 (연합뉴스 2002. 3. 21)
양상석씨 검시사건부 사라져 (한국일보 2002. 3. 22)

4. 신호수 사건관련 보도

"신호수씨 발목 족쇄 타살 가능성" (국민일보 2002. 4. 8)
신호수씨 수사종결보고서 경찰이 결재 조작 (한국일보 2002. 4. 12)

5. 한희철 사건관련 보도

"녹화사업 가혹행위로 자살" (국민일보 2002. 4. 26)
몽둥이 구타당했다 (한겨레 2002. 4. 27)
"녹화사업중 숨진 한희철씨 가혹행위등 비관 자살한 것 (동아일보 2002. 4. 27)

6. 특별법개정 관련 보도

의문사규명위, 법개정 해야 (대한매일 2002. 1. 18)
의문사법 개정안 2월 통과 사실상 무산 (동아일보 2002. 2. 25)
'의문사특별법 무산' 유가족 반발 (대한매일 2002. 2. 25)
의문사규명 특별법 개정하라 (경향신문 2002. 2. 25)
의문사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사실상 무산 (한국일보 2002. 2. 25)

7. 이윤성 사건관련 보도

정권차원 '운동권학생 격리'_80년대 녹화사업, 이윤성씨 사망사건 (한겨레신문 2001. 10. 22)
"의문사위 한계" 유가족 소송 (국민일보 2001. 10. 24)
의문사유가족 국가상대 손배소 (연합뉴스 2001. 10. 24)
5공 '녹화사업' 희생자 유족 국가상대 첫 손배소 (경향신문 2001. 10. 25)
군의문사유가족 국가상대 1억 소 (동아일보 2001. 10. 25)
운동권 학생 군의문사 유가족 국가에 1억 소송 (세계일보 2001. 10. 25)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한겨레신문 2001. 10. 25)
군징집 의문사 유족 국가상대 첫 손배소 (대한매일 2001. 10. 25)
'이윤성씨 녹화사업과정 사망' 확인 (문화일보 2002. 2. 21)
이윤성씨 "녹화사업 과정서 사망" (세계일보 2002. 2. 22)
83년 군복무의문사 성대생 사망전 '녹화사업' 조사받아 (조선일보 2002. 2. 22)
녹화사업 과정 사망확인 (대한매일 2002. 2. 22)
83년 '군복무 자살' 성대생 '녹화사업'서 사망 밝혀져 (중앙 2002. 2. 22)
83년 군의문사 성대 이윤성씨 당시수사관 "정훈교육중 사망" (동아일보 2002. 2. 22)
기무사 92년도 민간인 사찰 (동아일보 2002. 2. 22)
'녹화사업' 중 사망 (한국일보 2002. 2. 22)
'녹화사업과정 사망' 확인 (경향신문 2002. 2. 22)
"이윤성씨 사망전 운동권 친구만나" (내일신문 2002. 4. 30)
강제징집 의문사 이윤성씨 군 '녹화사업' 과정서 숨져 (한겨레 2002. 2. 22)
강제징집 이윤성씨 '프락치' 강요 당한 듯 (한겨레 2002. 4. 30)

8. 문용섭 사건관련 보도

88년 의문사 문용섭씨 구사대 폭력으로 사망 (문화일보 2002. 5. 1)
'구사대 청부폭력' 양심선언 (국민일보 2002. 5. 1)
88년 문용섭씨 의문사 구사대 개입 밝혀져 (한국일보 2002. 5. 2)
88년 문용섭씨 사망에 구사대 개입 진술확보 (한겨레 2002. 5. 2)
검·경찰 축소·은폐 의혹 (노동일보 2002. 5. 1)

9. 의문사 규명위 출범 1년 관련 보도

의문사진상규명위 출범1년 '최종길교수 사건' 등 성과 (한국일보 2001. 10. 18)
의문사규명위 출범1년, 83건중 11건 마무리_남은 기한 촉박 (동아일보 2001. 10. 18)
의문사규명위 출범1년, 최종길 교수 간첩누명 등 벗겨 (중앙일보 2001. 10. 18)
할일 산적_ 위상강화·내부개혁 필요 (국민일보 2001. 10. 17)
출범 1주년 맞는 의문사진상규명위 (연합뉴스 2001. 11. 17)

10. 탁은주 사건 관련 보도

10년전 의문사 여대생(탁은주) 무연고 묘지 매장 확인 (국민일보 2001. 10. 12)
실종 10년만에 여대생 시신확인 (한국일보 2001. 10. 13)
의문의 실종 여대생 10년만에 사망 확인 (동아일보 2001. 10. 13)

91년 실종 여대생 사망 확인 (한겨레 2001. 10. 13)

11. 최종길교수 사건 관련 보도

'최종길교수 고문' 확인 (경향신문 2001. 10. 19)
"최종길교수 사건 중정서 조작" (중앙일보 2001. 10. 19)
최종길 교수 의문사 중정서 조직적 은폐(한겨레 2001. 10. 19)
"중정서 최종길교수사건 은폐 (대한매일 2001. 10. 19)
73년 의문사 최종길교수 중정, 부검감정서 조작의혹
(한국일보 2001. 10. 19)
중정, 최종길교수사건 조직적 은폐 (동아일보 2001. 10. 19)
정권비판 세력 '재갈 물리기' 포석 (동아일보 2001. 10. 22)
"최종길교수 중정공작 희생양" (동아일보 2001. 10. 22)
'타살' 가닥 · · · 의문사 규명 가속도 (국민일보 2001. 12. 10)
"최종길교수 창밖 던졌다" (국민일보 2001. 12. 10)
"아버지 억울한 죽음 밝혀질 것" (세계일보 2001. 12. 11)
"수사관이 7층서 떠밀어" (조선일보 2001. 12 .11)
중정서 조사받다 사망 유신이후 의문사 '1호' (세계일보 2001. 12. 11)
"의문사 최종길교수 중정직원 의해 타살" (세계일보 2001. 12. 11)
'아사상태' 자살위장 가능성 (대한매일 2001. 12. 11)
"최종길교수 타살됐다" (대한매일 2001. 12. 11)
타살정황 구체화 진상규명 속도 (한겨레신문 2001. 12. 11)
"'최종길교수 7층서 밀었다'들어" 중정간부 '타살'증언
(한겨레신문 2001. 12. 11)
최교수 '죽음의 진실' 밝혀지나 (경향신문 2001. 12.11)
"수사관이 7층서 떼밀어 사망" (경향신문 2110. 12. 11)
'의문사 1호' 진실 찾나 (한국일보 2001. 12. 11)
"의문사 최종길교수 수사관이 7층서 밀어" (한국일보 2001. 12. 11)
'타살 의혹' 풀 결정적 단서 (중앙일보 2001. 12. 11)
73년 의문사 최종길교수 "수사관이 7층서 떠밀어" (중앙일보 2001. 12. 11)
'의문사 규명' 공소시효 없다 (문화일보 2001. 12. 11)
"중정서 의문사 최종길교수 수사관이 7층서 떠밀었다"
(동아일보 2001. 12. 11)
중정 조작은폐 조사 불가피 (동아일보 2001. 12. 11)
28년만에 '타살 가능성' 첫 증언, 추가증언 나와야 진상 밝혀질 듯
(조선일보 2001. 12. 11)
최종길교수 '타살' 첫 내부진술 (문화일보 2001. 12. 11)
"그들이 진실 밝히면 용서" (국민일보 2001. 12. 11)
의문사 진상규명의 새 계기로 (국민일보 2001. 12. 11)
최교수 사인 짜맞추기 감찰 의혹 (동아일보 2001. 12. 12)
김치열 · 이후락씨 곧 소환 (한국일보 2001. 12. 12)
'유사사건도 재조사하라' (경향신문2001. 12. 12)
국정원 "최교수 의문사 규명 협조" (한겨레신문 2001. 12. 12)
'최종길교수 타살' 재조사, 이후락 · 김치열씨 곧 소환
(대한매일 2001. 12. 12)
반인륜범죄 심판에 시한없다 (한겨레신문 2001. 12. 12)
최교수 사인은 '공권력 타살'? (경향신문 2001. 12. 12)
의문사규명 공소시효는 없다 (세계일보 2001. 12. 12)
최교수 타살증언과 역사의 힘 (대한매일 2001. 12. 12)
국정원이 앞장 설 일 (한국일보 2001. 12. 12)
양심적인 증언이 열쇠다 (한국일보 2001. 12. 12)
의문사위 권한 강화를 (조선일보 2001.12. 12)
"최교수 타살 중정 윗선도 알았다" (중앙 2001. 12. 12)
'최교수 타살'의 개연성 (조선일보 2001. 12. 12)
"대학을 신앙처럼 사랑하던 사람" (조선일보 2001. 12. 13)
변협"수지김·최종길교수사건 조속 규명을" (동아일보 2001. 12. 13)
"수지김·최교수사건들 비참한 인권유린행위 (세계일보 2001. 12. 13)
'최종길사건' 검찰 묵인의혹 (경향신문 2001. 12. 13)
'역사의 백미러' (한겨레신문 2001. 12. 13)
'공권력 살인' 국가에 무한책임 (중앙일보 2001. 12. 13)
미, 최교수 타살 알고 있었다 (중앙일보 2001. 12. 13)
반인륜범죄 '시효'없애자 (국민일보 2001. 12. 13)
최종길 교수 의문사 조사 이후락씨 "협조" (세계일보 2001. 12. 28)
이후락씨 다음주 방문조사 (경향신문 2001 .12. 28)
이후락씨 "조사 응하겠다" (한겨레신문 2001. 12 .28)
최종길교수 의문사 관련 이후락씨 조사협조 밝혀
(대한매일 2001. 12. 28)
이후락씨 "조사 응하겠다" (한국일보 2001. 12. 28)
이후락씨, 의문사위 조사받기로 (중앙일보 2001. 12. 28)
이후락씨 곧 방문조사 (동아일보 2001. 12. 28)
최종길교수 고문사망후 건물밖으로 대던져진 듯 (동아일보 2002. 1. 18)
'최교수 의문사' 다뤄 (연합뉴스 2002. 1. 23)
"최종길씨 고문사 가능성" (중앙일보 2002 .1. 26)
일본 법의학자들도 "최종길교수 고문치사 가능성 높아"
(한겨레 2002. 1. 26)
최종길교수 전기고문사 가능성 (한국일보 2002. 1. 26)
최종길교수 고문치사 가능성 커 (대한매일 2002. 1. 26)
최종길 교수 전기고문으로 사망한 듯" (동아일보 2002. 1. 26)
최종길교수 '의문사'인정 못받는다 (국민일보 2002. 2. 8)
"최종길 교수 사건 박정희대통령에 직보 (국민일보 2002. 3. 5)
이후락 "최교수사건 박대통령에 직보" (연합뉴스 2002. 3. 6)
"최종길교수 사망사건 박대통령에 직접보고" (한겨레 2002. 3. 6)
"최종길 교수 사건 박대통령에 보고" (중앙일보 2002. 3. 6)
"최종길교수 사망 박대통령에 보고 (동아일보 2002. 3. 6)
"최종길교수 자살 가능성" (동아일보 2002. 3. 7)
"최종길교수 사망현장 중정요원 입맞춰" (국민일보 4. 29)
중정직원 사전에 입맞춰 (문화일보 2002. 4. 29)
중정직원 진술 사전조율 (경향신문 2002. 4. 30)
중정직원들 사전에 진술맞춰 (세계일보 2002. 4. 30)
중정요원 '입맞춤' 드러나 (대한매일 2002. 4. 30)
중정직원들 사전에 입맞춰 (한국일보 2002. 4. 30)
"최종길 교수 자살 아니다" (대한매일 2002. 5. 1)
"최종길교수 사망경위 중앙정보부 사후 조작" (한겨레 2002. 5 .1)
중정, '최교수 의문사' 조직적 은폐 (내일신문 2002. 5. 1)
고문으로 숨진 뒤 추락했다 (시사저널 2002. 5. 16)
"최교수 타살 알고서도 중정 수뇌 자살로 몰아" (한겨레 2002. 5. 15)
"최종길교수 간첩혐의 씌워 자살위장" (동아일보 2002. 5. 20)
"최종길교수 공작원 삼으려 연행 (한겨레 2002. 5. 22)
의문사 최종길교수 공권력에 사망 판정 (문화일보 2002. 5. 27)
최종길교수 '의문사'인정 의미 (연합뉴스 2002. 5. 27)

최종길교수 죽음, 민주화운동 관련 인정 (연합뉴스 2002. 5. 27)
"29년만에 밝혀진 의문사" (YTN 2002. 5. 27)
최종길 교수 죽음, 민주화 운동 인정 (KBS 2002. 5. 27)
공권력에 의한 타살 첫확인 (노동일보 2002. 5. 28)
"최종길교수 위법공권력에 의해 사망" (한겨레 2002. 5. 28)
"최종길교수 공권력에 희생" (경향신문 2002. 5. 28)
고문사망 가능성 크다 (조선일보 2002. 5. 28)
최종길교수 '공권력 사망'결정 의미 (한겨레 2002. 5. 28)
"최종길교수 공권력의해 사망" (한국일보 2002. 5. 28)
"공권력 행사로 최종길 교수 사망" (국민일보 2002. 5. 28)
"의문사 최종길교수 공권력에 의해 희생 (중앙일보 2002. 5. 28)
'독재폭력' 국가차원 입증 (대한매일 2002. 5. 28)
최종길교수 사망 '민주화'인정 (세계일보 2002. 5. 28)
최종길교수 '공권력에 희생' (대한매일 2002. 5. 28)
국가폭력이 빚은 의문사 (동아일보 2002. 5. 28)
"최종길 교수, 공권력에 의해 사망" (동아일보 2002. 5. 28)
정권차원서 간첩조작 입증 (동아일보 2002. 5. 28)
"사망원인 공권력" (MBC 2002. 5. 27)
최교수 명예회복 당연하다 (한국일보 2002. 5. 29)
의문사 규명, 갈 길 멀다 (중앙일보 2002. 5. 29)
최종길 교수 '죽음'이 남긴 숙제 (한겨레신문 2002. 5. 29)
73년 유럽거점 간첩단사건 조작 (내일신문 2002. 5. 30)
최종길 교수 유족 국가에 손배소 (연합뉴스 2002. 5. 30)
"70년대 유럽간첩단 중정에 의해 조작" (한국일보 2002. 5. 30)
"간첩도 연루자도 없었다 (한겨레 2002. 5. 30)
"73년 유럽간첩단 사건은 조작" (대한매일 2002. 5. 30)
최종길교수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 (대한매일 2002. 5. 30)
"유럽거점 간첩단은 없었다" (경향신문 2002. 5. 30)
조작으로 드러난 간첩단 사건 (세계일보 2002. 5. 31)
"최종길교수 연루 조사 유럽간첩단사건은 조작" (국민일보 2002. 5. 30)

12. 이내창 사건 관련 보도

목격자 진술 · 증거사진 조작 결론 (내일신문 2002. 1. 10)
사망직전 안기부직원 동행 (문화일보 2002. 1. 10)
"이내창씨도 타살 가능성" (국민일보 2002. 1. 10)
이내창 사건 국정원 협조해야 (한겨레 2002. 1. 11)
"이내창씨 타살 가능성" (한겨레 2002. 1. 11)
국정원의 자정결의 (세계일보 2002. 1. 11)
이내창씨 타살의혹 (세계일보 2002. 1. 11)
실족사 아닌 타살 가능성 (한국일보 2002. 1. 11)
"89년 변사체 발견 이내창씨 사망직전 안기부직원 동행"
(경향신문 2002. 1. 11)
"의문사 이내창씨 타살가능" (대한매일 2002 .1 .11)
사망직전 안기부직원 동행 (중앙일보 2002. 1. 11)
의문사 이내창씨 안기부원과 동행 (동아일보 2002. 1. 11)
사망직전 안기부직원 만나 (조선일보 2002. 1. 11)
국정원 "이내창사건 규명 지원" (연합뉴스 2002. 2. 11)
국정원 의문사해결 협조 관심 (연합뉴스 2002. 2. 11)
"국정원 이내창 핵심자료 제출않해" (대한매일 2002. 1. 14)
국정원 최교수 의문사 규명 협조 (한겨레 2002. 1. 14)

13. 녹화사업 관련 보도자료

80년대 운동권학생 1,100명 강제징집, 관계기관 총동원 '합작품'
(한겨레 2001. 10. 22)
군부정권의 추악한 과거 (한겨레 2001. 10. 23)
'녹화사업' 진상규명 요구 (한겨레 2001. 10. 24)
기무사, 의문사위 조사거부 (국민일보 2001. 12. 14)
"기무사, 의문사위 대화 녹취" (문화일보 2001. 12. 14)
기무사, 의문사규명위 조사 거부 (동아일보 2001. 12. 15)
의문사 규명 거부해선 안된다 (동아일보 2001. 12. 17)
대통령 위에 있는 공안기관들 (한겨레 2001. 12. 17)
80년대 군 '녹화사업' 전두환씨 입김작용 (중앙일보 2002. 2. 20)
"전두환씨가 사실상 지시해" (한겨레 2002. 2. 20)
"전전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 (동아일보 2002. 2. 20)
의문사 규명위 "전두환씨 조사" (조선일보 2002. 2. 20)
'녹화사업' 전두환씨가 지시 (한국일보 2002. 2. 20)
"신군부 '녹화사업' 집권전부터 계획" (한겨레 2002. 2. 21)
'녹화사업' 신군부 집권이전 계획 (문화일보 2002. 2. 21)
전씨 보안사에 지시뒤 결재까지 (문화일보 2002. 2. 19)
녹화사업 진상 밝혀야 (대한매일 2002. 2. 21)
녹화사업 몸통, 처벌길 열어야 (한겨레 2002. 2. 22)
베일 벗겨지는 '녹화사업' (한국일보 2002. 2. 23)
신군부 '녹화사업' 국가기관 총동원 (국민일보 2002. 2. 28)
의문사위 '녹화사업' 소환조사 현역의원 3명 불응 (국민일보 2002. 3. 4)
'녹화사업' 조사 의원 3명 불응 (한국일보 2002. 3. 5)
정형근 의원 등 3명 의문사위 소환 불응 (한겨레 20002. 3. 5)
의문사위 '녹화사업' 조사 국회의원 3명 소환불응 (중앙일보 2002. 3. 5)
"정형근 · 최연희 · 유흥수 녹화사업 진상조사 응하라"
(동아일보 2002. 3. 5)

14. '인혁당' 사건 관련 보도자료

'인혁당' 진실규명 길 열려 (경향신문 2001. 12. 15)
'인민혁명당' 수사 · 공판기록 첫 공개 (조선일보 2001. 12. 15)
인혁당 · 민청학련 기록 찾았다 (한겨레 2001. 12. 15)
'인혁당' 공판기록 첫 공개 (한국일보 2001. 12. 15)
'인혁당-민청학련' 수사기록 찾았다 (동아일보 2001. 12. 15)
'인혁당' 수사기록 첫 공개 (대한매일 2001. 12. 15)
"인혁당 사건은 완전 날조됐다" (시민의신문 2001. 12. 24)

15. 장준하 사건 관련 보도

장준하씨도 타살 잠정 결론 (한겨레 2001. 12. 13)
장준하 선생 의문사 중정서 개입 가능성 (경향신문 2002. 3. 6)
"장준하선생 의문사 중정 개입가능성" (동아일보 2002. 3. 6)
"장준하선생 의문사 현장에 기관원 3명 있었다" (한국일보 2002. 3. 6)
장준하 의문사 중정개입 의혹 (연합뉴스 2002. 3. 5)
의문사규명위, 중정직원 관련여부 조사 (내일신문 2002. 3. 6)

정형근의원 떳떳이 조사받아야 (한겨레 2002. 3. 6)
중정서 자택전화 감청 (한국일보 2002. 5. 8)
장준하 선생 동향보고서 조작의혹 (KBS 2002. 5. 8)

16. 김준배 사건 관련 보도

"의문사 김준배씨 검거 경찰에 포섭당해 협조 (국민일보 2001. 9. 7)
"97년 추락사 대학생 주요사인은 구타" (중앙일보 2002. 3. 8)
"김준배씨 사인은 구타" (한국일보 2002. 3. 8)
"97년 의문사 김준배씨 사인은 구타" (경향신문 2002. 3. 8)
최종길, 김준배 사인은 '양면성 압박' (연합뉴스 2002. 5. 5)
일 법의학자 "구타 의한 것" (한겨레 2002. 5. 6)

17. 기타 위원회 활동 관련보도

어떤 의문사 (한국일보 2001. 9. 30)
의문사 규명에 시한은 없다 (한겨레 2001. 10. 19)
벽에 부닥친 '의문사 규명위' (문화일보 2001. 11. 30)
유가족 · 규명위 갈등 폭발 (국민일보 2001. 11. 30)
'의문사규명위' 파행위기 (국민일보 2001. 11. 30)
의문사규명위 위기 민간조사관 줄사표 (한겨레 2001. 12. 1)
의문사진상위 파행운영 (대한매일 2001. 12. 1)
의문사규명위 '위기에' (한국일보 2001. 12. 1)
의문사규명위 파행위기 (동아일보 2001. 12. 1)
의문사규명위 갈등 심화 (조선일보 2001. 12. 1)
의문사규명위 파행 (중앙일보 2001. 12. 1)
"한국 인권수준 여전히 미흡" (한국일보 2001. 12. 10)
변협 2000년 인권 보고서 (중앙일보 2001. 12. 10)
의문사위-민주화보상위 충돌 (중앙일보 2001. 12. 13)
인권과 신권 (국민일보 2001. 12. 15)
국가폭력과 연대의식 (한겨레 2001. 12. 17)
'인권사각지대' 에도 햇빛을 (대한매일 2001. 12. 17)
시민단체 의문사규명위서 농성 (동아일보 2001. 12. 18)
의문사 진상규명위 '위기' (한겨레 2001. 12. 18)
'과거사 바로잡기' 좌초 위기 (한국일보 2001. 12. 18)
위기 맞은 의문사규명위 (경향신문 2001. 12. 18)
이후락시 역사앞에 증언하라 (대한매일 2001. 12. 18)
의문사 규명 멈춰서는 안된다 (중앙일보 2001. 12. 19)
"의문사 진상조사위 못믿겠다" (문화일보 2001. 12. 20)
공권력의 인권침해 국가배상을 (한국일보 2001. 12. 24)
의문사 규명위원 3명 사퇴 (한겨레 2001. 12. 24)
의문사규명위 위원 3명 사퇴 (동아일보 2001. 12. 24)
의문사위 비상임위원 3명 사의 (중앙일보 2001. 12. 24)
의문사규명위 개혁촉구 비상임위원 3명 사퇴서 (한국일보 2001. 12. 24)
'공권력 살인' 진상밝혀라 (대한매일 2001. 12. 24)
의문사규명위 안팎 시련 (문화일보 2001. 12. 24)
의문사진상규명위 '파행' (국민일보 2001. 12. 24)
의문사진상규명위 '위원장 퇴진' 논란 (시민의신문 2001. 12. 24)
의문사 규명위 "특별법 개정 작업" (한국일보 2001. 12. 29)
의문사위 파행 위원장 사퇴서 (중앙일보 2002. 1. 15)
의문사 조사권 강화 추진 (한겨레 2001. 12. 29)
의문사진상위 위원장 사의 (경향신문 2001. 1. 1)
'의문사위' 위원장 등 3명 사의 (문화일보 2001. 1. 1)
의문의 죽음들 (한겨레 2002. 1. 9)
의문사 유족농성 책임 규명위 동반사퇴 파문 (동아일보 2002. 1. 15)
의문사 위원장 등 3명 "사퇴서 제출 (한국일보 2002. 1. 15)
의문사 진상규명 계속돼야 (국민일보 2002. 1. 15)
규명위 상임위원 3명 사퇴서 제출 (연합뉴스 2002. 1. 15)
의문사규명 활동여건 만들어줘야 (연합뉴스 2002. 1. 15)
의문사규명위 와해 위기 (대한매일 2002. 1. 15)
역사 바로세우기 소홀히 말아야 (한겨레 2002. 1. 16)
"억울한 죽음 파헤치는 것만큼 '민주화' 포장 벗기는 것도 의미"
(세계일보 2002. 1. 17)
위기의 의문사규명위 어디로 가나 (동아일보 2002. 1. 17)
의문사위 조사 무산위기 (한국일보 2002. 1. 26)
이름값도 못하고 간판 뗄 판 (중앙일보 2002. 1. 19)
국민의 정부 위원회들 헛돈다 (중앙일보 2002. 1. 19)
"공소시효 배제 · 강제구인" (한국일보 2002. 1. 29)
"의문사 조사권 강화를" (대한매일 2002. 1. 29)
'성악가 경찰' 세종문화회관 무대선다 (경향신문 2002. 1. 31)
경찰간부가 가곡 독창회 (한국일보 2002. 1. 31)
인권위, 의문사진상규명위 정상화 될 듯(연합뉴스 2002. 1. 30)
경관이 부르는 슈베르트 '세레나데' (조선일보 2002. 1. 31)
성악가 꿈 이룬 경찰간부 (대한매일 2002. 1. 31)
국회 끝내 표류 (대한매일 2002. 2. 21)
'윤석양 폭로' 후 약속 깬 기무사, 민간사찰 계속 (국민일보 2002. 2. 21)
의문사 '의문' 으로 남길 것인가 (한겨레 2002. 2. 23)
의문사위 또 '시끌' (조선일보 2002. 3. 7)
표류하는 의문사위 (조선일보 2002. 3. 8)
미궁에 빠진 의문사규명위 (동아일보 2002. 3. 9)
태생적 한계 예견된 사태 (대한매일 2002. 3. 9)
공무원 첫 집단항명 (대한매일 2002. 3. 9)
의문사진상규명위원장 한상범교수 내정 (대한매일신문 2002. 3. 12)
파견조사관의 '직무유기' (한국일보 2002. 3. 12)
의문사위위원장 한상범씨 내정 (조선일보 2002. 3. 12)
의문사규명위 새 위원장 한상범 동국대교수 거론
(동아일보 2002. 3. 12)
의문사규명위 '집안단속' 급선무 (주간동아 3. 28)
죄많은 특권층 (한겨레 2002. 3. 23)
"70년대 전향공작 기관개입 물증확보" (연합뉴스 2002. 4. 1)
국가기관 개입 공문확인 (한겨레 2002. 4. 2)
국가기관 개입 폭행 · 고문 (한국일보 2002. 4. 2)
"70년대 전향공작 물증 확보" (내일신문 2002. 4. 2)
의문사위원장 한상범씨 (중앙일보 2002. 4. 10)
국회 여성위원장 이연숙의원 (세계일보 2002. 4. 10)
의문사규명위원장 한상범씨 (한겨레 2002. 4. 10)
"마지막 남은 한방울의 진실까지 캐낼 터" (한겨레 2002. 4. 10)
의문사규명위원장 한상범씨 (동아일보 2002. 4. 12)
5월 아버지의 피눈물 (한국일보 2002. 5. 8)
"안기부 예산으로 공작비용 책정했다" (노동일보 2002. 5. 15)

임기윤 사건 관련 보도

2001. 9. 28 YTN

임기윤씨 사망 공권력개입

대통령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다 숨진 임기윤 목사의 사망 원인은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돼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임 목사는 70년대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유신 반대와 구속자 석방운동 등을 전개하다, 80년 5월 신군부가 제기한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에 휘말려 같은해 7월 부산지구 합동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쓰러져 닷새만에 숨졌습니다.

정병화[chung@ytn.co.kr].

2001. 9. 28 연합뉴스

임기윤목사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 인정(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지난 80년 부산 보안사 사무실에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조사받던중 의문사한 임기윤 목사(당시 58세)가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다고 28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임 목사는 합동수사단의 조사과정에서 담당수사관의 모욕적 언사와 격한 언쟁등에 격분해 평소 지병인 고혈압 증세가 순간적으로 악화되면서 뇌출혈로 사망했다"며 "임 목사가 비록 물리적 폭력같은 가혹행위를 받은 것 같지는 않으나 사흘간 연금상태에서 강제조사를 받다가 숨진 점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부산지역 대표적 민주화인사 가운데 한명인 임 목사는 80년 7월19일 부산지구 합동수사단에 자진출두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던중 사흘만에 쓰러져 26일 부산대병원에서 뇌일혈로 사망하기까지 구타등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유가족에 의해 제기됐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91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자취방에서 누워 숨진채 발견된 한겨레사회연구소 김영환(당시 26세)연구원의 죽음은 심장 대동맥의 갑작스런 파열에 따른 단순 돌발 변사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의문사 진정을 기각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10월 출범이후 위원회가 조사중인 의문사 83건중 민주화관련 타살로 2건이 인정되고 9건이 기각됐으며 1건이 진정취하됐다.

sungjin@yna.co.kr

(끝)

東亞日報 201. 9. 29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임기윤목사 공권력탓 사망"

의문사 규명위 발표

1980년 부산의 보안사 사무실에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숨진 임기윤 목사(당시 58세)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梁承圭)가 28일 발표했다.

진상규명위원회 문덕형(文德炯) 상임위원은 "임 목사는 합동수사단의 조사과정에서 담당수사관의 모욕적 언사와 격한 언쟁 등으로 평소 지병인 고혈압 증세가 순간적으로 악화돼 뇌졸중으로 사망했다"며 "임 목사가 물리적 폭력 같은 가혹행위를 당한 것 같지는 않으나 사흘간 연금상태에서 강제조사를 받다가 숨진 점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임 목사는 80년 7월19일 부산지구 합동수사단에 자진 출두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사흘 만에 쓰러져 부산대병원에서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중앙일보 2001. 9. 29

80년 보안사서 사망 임기윤씨 의문사 인정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8일 1980년 확대계엄령 당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혐의로 부산 보안사 분실에서 조사를 받다 숨진 부산신학교 임기윤(당시 58세·목사)운영이사장의 죽음을 의문사로 인정했다.

임목사는 75년 부산인권선교협의회장을 역임하며 '유신반대 국민청원운동' 등 부산에서 민주화운동을 벌이다 80년 7월 19일 부산지구 합동수사단에 소환돼 조사를 받다 일주일 만에 숨졌다.

위원회는 "당시 합수단이 구체적 범죄혐의 없이 임목사를 사흘간 구금 조사한 것은 불법"이라며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임목사가 사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공개토론회 관련보도

2002. 5. 24 東亞日報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23일 오후 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콘퍼런스홀에서 의문사 진상 규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연다. 02-3703-5975

2002. 5. 24 노동일보

"국가기관 비협조로 진상규명 어려워"

의문사 진상규명위 공개토론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국가기관의 사건관련 기록제공 거부와 퇴직자에 대한 정보제공 거부 등으로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준곤 진상규명위 제1상임위원은 23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의문사진상규명의 현황과 과제'라는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상임위원은 이날 "사건관련 기록은 진상규명에 핵심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임위원은 "국가기관 현직자에 대한 조사는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사건과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퇴직자에 대한 정보제공은 소극적인 편"이라고 덧붙였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비협조 사유는 △보안상의 문제 △개인정보 유출문제 △사건의 무관성 △해당자료 없음 등이다.

김상임위원은 "보안의 이유로 거부하기 이전에 자료내용의 안보상 중요정도와 진상규명의 기여도에 따라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조사권을 부여받는 국가기관임에도 비공개대상 정보임을 이유로 자료요청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화운동 관련성 여부는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위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인데도 일부 기관이 이를 이유로 협조를 거부하는 것은 위원회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상임위원은 "보안에 대해 일부 기관이 우려를 하고 있지만 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서 업무활동 중 작성되거나 입수된 보안대상 정보가 철저히 관리되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검찰, 경찰 등 의문사 관련 국가기관에 토론회 참가를 요구했으나 대부분의 기관이 난색을 표시, 교수와 시민단체 관계자만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류정민 기자 dongack@laborw.com

"민주화 범위 폭넓게 인정하자" "폭력 美化… 가치관 혼란우려"

의문사委 토론회 공방

'5·3 부산 동의대 사건'과 '전교조 운동'을 민주화보상심의위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화운동'에 대한 개념과 법적 보상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韓相範)가 23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 '의문사 진상규명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민주화운동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자"는 주장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포괄적 인정은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강경선(姜慶善) 방송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자발적 의사가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삼는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하면 민주화운동의 취지를 축소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또 "군부정권에 맞선 운동뿐 아니라 노동운동이나 반미운동과 같은 기존 권위에 대항한 이들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확대해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조남현 자유시민연대 대변인은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법질서를 유린한 폭력까지 미화되고 있다"며 "실정법을 어겼던 동의대 사건이나 전교조 운동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는 것은 법질서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또 민주화보상심의위의 결정 방식에 대해 "민주화운동을 심의위원 9명의 다수결로 정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판단해야 할 일을 소수의 주관적 견해에 맡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철홍 민주화보상심의위 전문위원은 "더디더라도 사회적·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陳仲彦기자 jinmir@chosun.com

의문사진상규명위 대국민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23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대국민 토론회를 갖고 의문사 진상 규명의 성과 및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상웅 성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정부, 사법기관, 언론 나아가 국민 모두가 민주화 과정에서 스러져간 이들에 대한 망각과 외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국가폭력과 반이성적 행위가 재발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의문사는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강경선 방송대 법학과 교수는 발표문을 통해 "`의문사' 인정요건인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해석에서, 보상심의위는 엄격한 대상선정을 위해 자발적 의사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이는 민주화운동의 취지를 축소하는 측면이 있다"며 "민주화유공자를 밝히는 `민주화유공자법'보다는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피해자를 구제하는 `민주화피해보상자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는 "위원회는 증거조사와 판결을 병행하는 준(準) 사법적 기구로 운영되고 있지만 수사에 필요한 권한이 없다는 결정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공권력의 은폐나 조작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사활동으로는 사실상 진상규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한계를 지적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의 이은경 사무처장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시켰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위는 기본적으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사에 대해서만 진상규명의 대상으로 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의문사진상규명의 대상을 일체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또 "피진정기관에 대해서는 더이상 아무런 대책없이 협조만을 바라는 자세에서 벗어나 명백한 조사대상으로 간주, 기관들의 비협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홍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개념을 확대하자는 일부의 주장은 현재 보상심의위에 접수된 사건의 60% 이상이 처리된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민주화세력'만이 아니라 `일반시민'까지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해석의 일관성과 타당성을 담은 법적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시민연대의 조남현 대변인은 "민주화운동을 보상의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만큼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은 협의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전교조 해직교사들과 동의대 사건 관련자에 대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결정은 목적의 정당성 못지 않게 수단의 정당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자체와 모순을 낳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south@yna.co.kr

(끝)

조롱당하는 직속기관

23일 열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공개토론회는 지난 2년간의 활동을 점검하고 그 어려움의 원인과 배경을 밝히는 자리였다.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 등 조사대상이 되는 국가권력기관들은 위원회의 거듭된 요청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월드컵 때문에 바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보수언론의 입심 좋은 논객들도 오지 않았다. "오졌다"고 하던 경찰청도 마지막 순간 '불참'으로 돌아섰다. '다른 모든 기관들이 오지 않기 때문'이 불참 이유였다.

의문사위원회 9월16일이면 간판을 내려야 하는 시한부 조직이다. 조사대상인 국가기관들은 위원회의 이 시한부 운명을 겨냥해서 차일피일하고 있다. 의문사와 관련된 당시 수사관이나 그 상급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하면 한 달 뒤에 이름을 가르쳐주고, 다시 한 달 뒤에 주소지, 또 한 달 뒤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주는 식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대통령의 권위는 조롱당하고 있다.

과거를 밝히고 청산하는 일이 이토록 어려운 까닭은 그 과거가 현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세월을 뭉개서 진실을 피해나갈 때, '오늘'은 또다시 청산해야 할 과거로 전락해간다.

hoonk@hani.co.kr

양상석 사건관련 보도

양상석씨 검시사건부 사라져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의문사 진정사건 1호로 지난 1971년 신민당 국회의원 선거 중 숨진 양상석씨의 검시사건부가 사라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 관계자는 21일 "검찰에서 정부기록소로 넘어갔어야 할 검시사건부가 사라진 사실이 조사도중 밝혀졌다"며 "사건을 맡았던 경찰 관계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수사은폐 의혹을 규명할 유일한 문서가 사라져 진상규명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을 맡았던 전주지검측이 78년 검시사건부 총 6부를 정부기록보존소에 넘겼다고 밝혔다가 더 찾아봐야 겠다며 말을 바꿨다"며 "정부기록보존소에 양씨의 검시사건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검찰이 기록을 의도적으로 폐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검사와 사건 개시 및 종결일을 명시한 검시사건부는 사건발생후 10년후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 영구 보존토록 돼 있다.

지난 71년 신민당 충남 금산지구당 위원장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해 선거운동을 하던 양씨는 김대중 신민당 대표와 박정희 대통령의 대선 투표 당일인 4월27일 실종돼 3일만에 금산읍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south@yna.co.kr

(끝)

한국일보 2002. 3. 22

양상석씨 검시사건부 사라져

의문사위 진정사건 1호
검찰 의도적 은폐 의혹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진정사건 1호로 1971년 신민당 국회의원 선거운동 중 의문사한 양상석(楊商碩)씨의 검시사건부가 사라진 것으로 드러나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규명위 관계자는 21일 "검찰에서 정부기록보존소로 넘겼어야 할 문서가 없어진 사실이 사건 조사 도중 밝혀졌다"며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찰 관계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담당 검사 신원 등 수사은폐 의혹을 규명할 유일한 문서가 사라져 진상규명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말했다. 담당 검사와 사건 개시 및 종결 시점 등을 명시한 사건 검시부는 사건 발생 10년 후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해 영구보존토록 돼 있다.

규명위 관계자는 "아직 검찰 측에서 의도적으로 폐기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혀고 있지만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전주지검측은 "총 6부를 정부기록보존소에 넘겼다"고 통보해 온 후 다시 "더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바꿔 은폐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태다.

71년 신민당 충남 금산지구당 위원장으로 국회의원에 입후보해 선거운동을 벌이던 양씨는 김대중(金大中) 신민당 대표와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의 대선 투표 당일인 4월27일 실종된 후 3일만에 금산지역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검찰은 당시 양씨가 할복자살했다고 발표했으나 사건 현장에 칼조차 없는 등 타살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신호수 사건 관련 보도

1986년 의문사 노동자 신호수씨

"발목 족쇄 타살 가능성"

의문사委 부검사진 분석 "가혹행위 흔적"
목격자들 "경찰관이 불러주는대로 진술"
당시 수사기관 증언조작등 은폐·축소

1986년 전남 여천군(현 여수시) 돌산읍 대미산 중턱 바위굴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신호수씨(당시 23세·노동자)가 사망전 경찰 수사관에게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당시 경찰은 목격자 증언을 조작하는 등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8일 "신씨의 부검사진 등에 대한 정밀분석 결과 신씨 발목에 족쇄를 채운 흔적이 발견됐다"며 "신씨가 사망하기 전 거꾸로 매달린 채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씨의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목격자들로부터 "신씨 변사사건에 대해 조사받을 때 경찰관이 불러주는 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또 유족들이 당시 신씨의 시신에서 발목 뼈에 난 상처를 봤다고 주장함에 따라 경찰의 가혹행위 여부 등을 정밀조사하기 위해 10일 신씨의 유골을 재조사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키로 했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시신의 두개골 파열 흔적에 대한 유족과 경찰, 부검의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도 유골 조사를 통해 규명할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수사 경찰관이 '신씨가 1986년 5·3 인천사태의 배후로 조사받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면서 "이 사건은 5·3 사태 이후 경찰이 단순 노동자였던 신씨까지도 대간첩작전인 '○○공작'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인권침해행위가 빈발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씨는 가혹행위로 인해 타살됐을 개연성이 높다"며 "신씨를 연행했던 서울 서부경찰서와 변사사건 조사를 맡았던 전남 여수경찰서 직원들을 상대로 사건의 은폐, 조작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대공계 직원 차모씨 등은 "신씨를 조사했으나 3시간여만에 훈방한 뒤 신씨가 서울 지리를 모른다고 해 서울역까지 바래다줬을 뿐 이후 행적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서 가스회사 직원으로 일했던 신씨는 1986년 6월11일 자취방에서 발견된 북한 전단에 대한 조사 등을 이유로 서부경찰서로 연행됐다가 8일뒤 전남 여천군 돌산읍 대미산 동굴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신씨가 자살한 것으로 처리, 수사를 종결했으며 발견 이틀만인 6월21일 돌산읍 평사리 공동묘지에 가매장한 뒤 뒤늦게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 신씨 가족은 2000년 11월 신씨의 사망원인을 규명해줄 것을 위원회에 신청했다.

강영수기자 nomad@kmib. co. kr

한국일보 2002. 4. 12

1986년 여천서 의문사 신호수씨

수사종결보고서 경찰이 결재 조작

의문사규명위 확인

경찰이 의문사 관련 수사종결보고서를 위조한 사실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경찰이 영구 보존해야 할 변사 수사기록을 폐기했거나 의도적으로 분실한 의혹이 제기됐다.

규명위는 1986년 전남 여천군 돌산읍 바위굴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신호수(당시 23세·노동자)씨 수사기록인 '장흉공작종결보고서'가 계장의 결재가 누락되고 과장의 사후 결재 과정에 조작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규명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위조 방식은 밝힐 수 없지만 사인 위조 등의 단순한 형태를 넘어서는 방식이었다"라고 말해, 신빙성 있는 조작혐의를 포착했음을 시사했다.

당시 신씨를 검거·조사했던 서울 서부경찰서는 신씨를 조사 3시간만에 훈방했다고 주장, 그 증거로 이 수사종결보고서를 규명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 소환 조사에서 보고서의 작성자, 결재 확인 조사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씨는 당시 경찰에 간첩혐의로 연행된 후 8일만에 동굴에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됐었다. 당시 경찰은 신씨가 훈방 후 자살한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지만, 발견 당시 팬티 차림이었고 수사 이틀만에 가족에 알리지 않은 채 시신을 가매장하는 등 타살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규명위는 또 89년 인천 H사에 근무하며 노조재건추진위원회 활동을 하던 중 의문사한 이재호(당시 25세)씨의 변사수사기록이 사라진 것을 확인, 경찰의 고의 폐기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이씨 사건은 당시 범인이 잡히지 않아 미제사건으로 분류돼 변사기록을 영구 보존하도록 돼 있다.

사건을 맡았던 인천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경황이 없어 기록을 흘린 것 같다"고 규명위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한희철 사건 관련 보도

83년 의문사 서울대생 한희철씨

"녹화사업 가혹행위로 자살"

"몽둥이 구타·전기고문"… 의문사委 진술 확보

1983년 군 초소 근무중 가슴에 소총 실탄 3발을 맞고 숨진 채 발견된 서울대생 한희철씨(당시 22세)는 녹화사업 과정에서 받은 가혹행위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밝혀졌다.

녹화사업은 신군부 시절인 1980년대 초 군과 관계당국이 일부 강제징집된 운동권 학생들에게 운동권 동료들에 대한 동향 파악 및 정보수집 등을 해오도록 강요한 비밀공작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 고위 관계자는 26일 "1983년 12월6일부터 10일까지 한씨를 조사했던 국군보안사령부 녹화사업 전담 정훈장교(당시 중위)로부터 '조사 도중 한씨를 몽둥이로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씨가 12월10일 근무지인 ○사단 본부대로 복귀한 뒤 부대동료 이모씨 등에게 대퇴부의 상처를 보이며 '보안사에서 전기고문을 두번 당했고 이젠 사방에서 감시를 받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특히 한씨가 초소근무를 같이 했던 후임병에게 맡긴 유서에서 녹화사업 도중에 받은 고문에 대한 두려움과 동료들을 배신한 데 대한 양심의 가책 등을 적고 있는 점으로 미뤄 한씨가 녹화사업을 비관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씨는 1983년 10월 군 정기휴가 도중 부천에서 함께 야학활동을 하던 한국외국어대생 신모씨가 수배중임을 알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친구 전모씨에게 신씨의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줄 것을 부탁하는 편지를 썼다가 신씨가 검거되면서 편지가 들통나 보안사 과천분실에서 조사받았다.

보안사 조사과정에서 한씨는 대학 1년때부터 부대 복귀 전까지 활동상황에 대한 자술서 40여장을 썼으며 조사 마지막날 5일째 반성문과 서약서를 쓰고 분실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979년 서울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한 뒤 대학 가톨릭학생회에서 활동해 온 한씨는 4학년때인 1982년 12월1일 입대했으나 1983년 12월11일 새벽 4시35분쯤 육군 ○사단 사령부 비문합동보관소 경계보초 근무중 가슴에 총탄 3발을 맞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은 한씨가 민주정치의 미흡성을 비관하고 빈곤한 사회생활에 대한 경제정의를 주장하다 유서를 써놓고 보초근무 도중 자살했다고 밝히고 수사를 종결했다. 강영수기자

한겨레 2002. 4. 27

1983년 녹화사업때 숨진 서울대생 한희철씨

몽둥이 구타 당했다

의문사규명위 진술 확보

1983년 군초소 근무 중 가슴에 총탄을 맞고 숨진 채 발견된 서울대생 한희철씨(당시 22살)가 이른바 '녹화사업'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6일 "1983년 당시 서울대생 한희철씨의 녹화사업을 담당했던 정훈장교(당시 중위)로부터 '한씨를 조사하던 중 몽둥이로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서울대 기계공학과 4학년 때인 82년 12월 입대한 뒤, 83년 말 운동권 학생을 대상으로 운동권 동료들에 대한 동향파악 및 정보수집 등을 강요한 비밀공작인 녹화사업에 끌려갔다.

소속 부대로 복귀한 한씨는 83년 12월11일 새벽 4시35분께 육군 ○사단에서 경계보초 근무 중 가슴에 총탄 세발을 맞고 숨진 채 발견됐으며, 당시 군부대는 한씨가 자살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

東亞日報 2002. 4. 27

"녹화사업중 숨진 한희철씨 가혹행위등 비관 자살한것"

의문사규명위

1983년 군 초소 근무중 숨진 서울대생 한희철씨(당시 22세)가 80년대 초 운동권 학생들의 강제징집 및 프락치 활용공작인 이른바 '녹화사업' 과정에서 받은 가혹행위 등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26일 "당시 한씨를 조사했던 국군보안사 녹화사업 전담 정훈장교로부터 '조사 도중 한씨를 둔기로 구타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

특별법개정 관련 보도

의문사규명위, 법개정해야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 시한 3개월을 남겨 놓고 난파 위기를 맞고 있다. 위원회가 진상규명에 소극적이라며 유족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지난 15일 위원장 등 상임위원 3명이 사표를 내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위원회가 하루빨리 이를 수습하고 본연의 업무에 들어가기 바란다.

역대 독재정권 아래에서 발생한 의문사의 진상을 밝히라는 유족들의 422일간에 걸친 농성투쟁 끝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난 2000년 10월 출범한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의 상황을 맞게 된 데에는 몇가지 요인이 있다. 위원회측은 위원회가 비록 유족들의 끈질긴 투쟁의 산물이긴 하지만 유족들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인식하는 반면, 유족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진정인 신분이 아니라 의문사를 함께 규명하는 동반자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시각 차이가 결국은 위원회와 유족들의 갈등을 깊게 한 측면도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83건의 진정을 접수해서 15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 가운데 2건이 의문사로 인용(認容)됐고 12건은 기각, 1건은 각하됐다.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에서 공권력 개입과 타살의 증거 등 두 가지 요건을 의문사 인용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타살'이라고 믿는 유족들로서는 위원회의 기각·각하 결정에 쉽게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은 위원회가 결정한 '의문사 인용 기준'을 존중하기 바란다.

의문사들은 최소한 10~20여년 전 독재정권 아래서 일어난 일이다. 의문사에 관련된 공안기관들은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며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 우리는 관련 공안기관들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결의 아래 위원회의 진상규명 노력에 적극 협조하도록 거듭 촉구한 바 있다. 위원회의 진상규명 노력이 이처럼 지지부진한 것은 무엇보다 위원회에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초법적 기구가 아니라서 수사권을 부여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이를 전담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거나 현직 검사들을 위원회에 파견해 현장조사를 지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차피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강제 수사권 문제도 함께 처리돼야 할 것이다.

진상규명위 설치 목적이 '국민의 정부는 과거 독재정권의 의문사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려 노력을 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데 있지 않다면, 위원회가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의문사법 개정안 2월통과 사실상 무산

조사기한 연장과 조사권한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의문사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15일 위원장과 제1상임위원이 사퇴한 뒤 정상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파행이 계속될 전망이다.

24일 진상규명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21일 간사단 회의를 갖고 조사권한 강화 등이 논란의 여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회기에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간사단은 개정안 중 의문사의 정의와 구제조치 조항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조사권한 강화는 법무부가 반대하며 공소시효 문제는 위헌 시비가 있어 이번 회기에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기한 연장은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간사단이 제시했으나 진상규명위측은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기한 연장도 사실상 어렵다는 반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진상규명위는 3월 16일까지 모든 의문사 사건의 조사를 끝내야 한다. 그러나 현재 68건 중 상당수가 제대로 조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의문사특별법 무산' 유가족 반발

"법개정 안되면 강경대처"

조사기한 연장과 조사권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문사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온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24일 민주당 이창복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지난 21일 간사단 회의를 열어 의문사특별법 개정안 중 조사권한 강화 등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 이번 회기에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의원측은 "의문사 정의와 구제조치 조항은 민주화보상심의위가, 조사권한은 법무부가 반대하고 있으며, 공소시효 문제는 위헌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측은 "조사권한 강화가 이뤄지지 않은 의문사법 개정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집단진정 철회 등 강공책을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kdaily.com

의문사규명 특별법 개정하라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진행해온 70여건의 의문사 조사가 곧 중단될 위기라고 한다. 국회 법사위가 엊그제 조사기간 연장과 조사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의문사특별법 개정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달 2일부터 15개월의 조사시한을 맞는 사건이 줄줄이 나올 판이니 거창한 명분을 갖고 출범한 진상규명위가 자칫 그동안 조사결과에 대한 결론도 못내린 채 문을 닫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법사위는 진상규명위의 권한 강화에 대한 법무부의 반대 등을 법안상정 포기 이유로 드는 모양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행 특별법은 규명위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마땅하다. 현행처럼 규명위가 해당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에게 출석을 요구해도 거부하면서 시간만 끌면 그만이라면 과거 권력기관의 음험한 진실은폐 행위를 파헤칠 수 없다.

현행 특별법이 과거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너무 미흡하다는 것은 그동안의 조사과정에서 이미 확인됐다. 지금까지 80여건의 진정사건 중 10여건만 조사가 완료됐고 그나마도 결과를 놓고 유족들과 규명위간 갈등을 빚는 근본원인도 현 특별법의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엊그제 전두환 정권시절 '녹화사업' 중 숨진 것으로 보도된 이윤성씨 사건은 물론 장준하 선생이나 최종길 교수 사건의 진상도 아직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다.

의문사의 진상을 보다 빨리,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여야 의원들은 특별법 개정에 앞장서길 바란다. 규명위에 계좌추적이나 통화내역 조사권은 물론 압수수색이나 구인권도 줘야 한다. 여기에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세계적 추세다. 법무부 등은 규명위의 임무가 길게는 수십년 동안 감춰진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유족들의 맺힌 한을 풀어주자는 것임을 안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의문사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사실상 무산

법사위, 회기내 상정않기로
유족들 "활동포기나" 반발

조사기한 연장과 조사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문사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돼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24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지난 21일 간사단 회의를 열어 의문사특별법 개정안 중 조사권한 부분에 대해 논란이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이번 회기에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창복(李昌馥) 의원측은 "간사단은 의문사의 정의와 구제조치 조항은 민주화보상심의위가, 조사권한은 법무부가 각각 반대하고 있으며, 공소시효 문제는 위헌시비도 있다는 점에서 법사위가 이번 회기에 다룰 수 있는 사안이 못된다고 결정했다"면서 "간사단은 단순한 기간 연장만을 위해서라면 의원입법이 아니라 정부입법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던 유가족측은 "조사권한 강화가 이뤄지지 않은 의문사법 개정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만큼 기간 연장만을 담은 개정안을 정부입법을 통해 제출하라는 말은 실질적인 의문사 조사활동을 포기하라는 의미"라며 반발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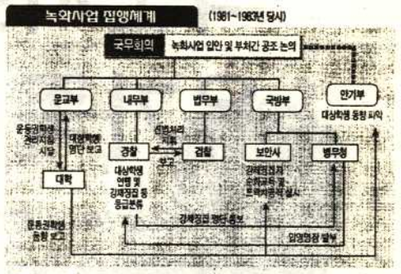
이윤성 사건관련 보도

정권차원 '운동권학생 격리'

■ 80년대 '녹화사업' 실체

연행-휴학·제적-입대 일사천리
일부학생은 학내 프락치로 활용

기무사 비협조 '최고책임자' 파악 난항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소환된 관련자들의 진술은 녹화사업의 집행 경로와 체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히 "국무회의와 관계기관 대책회의 같은 권력 최고위층에서 이 사업을 입안하고, 이후 부처간 진행과정을 조율했다"는 공안기관 관련자의 증언은 녹화사업의 전모 파악에 한걸음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녹화사업이란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과 편제 프락치 활동을 통한 정보수집을 위해 당국이 실시한 강제징집과 군복무중 '특별정훈교육'이란 이름으로 이뤄진 육체적·정신적 폭력이 수반된 정신교육 등을 가리킨다.

◇ 국가기관의 조직적 합작물=규명위 조사 결과, 1970년대까지 부분적으로 이뤄졌던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은 전두환 정권 출범 직후인 81년 보안사령부 대공처에 전담심사과를 설치하면서 본격화됐다.

보안사의 후신인 기무사는 최근 규명위에 보낸 자료에서 "당시 내무부는 입영대상자의 신병확보, 문교부는 학적변동 조처, 병무청은 입영대상자 지원서 접수 및 국방부 보고, 육·해군은 입영절차, 보안사령부는 학적변동 입대자에 대한 조언 등의 역할을 맡았다"고 밝혔다.

또 전 ㄱ대학 학생처장은 "학생 동향을 파악해 장학과 사무실에 상주한 문교부, 관할 경찰서, 치안본부, 서울시경, 안기부, 보안사 관계자들에게 알려줬다. 시위가담 학생이 연행되면 즉시 해당 학생의 학적변동을 처리했다"고 밝히는 등 당시 관련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유족단체를 통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경에서 입영대상자 명단을 각 관할 경찰서에 하달하면, 각 경찰서 정보과 학원팀에서 해당 학생을 연행해 활동정도에 따라 A·B·C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후 안기부와 검찰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검사지휘에 의해 사법처리하거나 곧바로 입대시켰다." (전 서울시경 정보과 고위관계자)

"치안본부 정보4과에서 학생운동 동향에 대한 대응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안기부와 보안사에서 이 사업을 제안하고, 내무부 장관이 참석한 국무회의의 지침에 따라 강제징집이 이뤄졌다." (전 치안본부 대공분실 관계자)

규명위에 출두한 전직 보안사령부 관계자는 "당시 보안사 예산의 절반을 이 사업에 쏟아부었다"고 말했다.

◇ 기무사 자료공개 거부=그러나 당시 정책입안자와 이를 지시한 최고책임자 등을 가려내는 작업은 기무사의 협조 거부와 내부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녹화사업 관련 핵심자료 공개요청에 대해, 기무사쪽은 "담당부서는 현재 폐지됐고, 관련자는 모두 퇴직했으며, 관련 문서는 보존연한이 지나 폐기했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규명위 관계자는 "77년 이전 보안사 예하부대 문서규정에는 이 자료들이 모두 '준영구보존'으로 지정돼 있었다"며 "77년 이후의 핵심자료도 기무사가 보존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난관의 원인은 위원회 내부에도 있다. 규명위 관계자는 "엄선된 군역문사 5건도 서로 담당이 틀려 공조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녹화사업 전체를 기획조사하는 조사관은 한 사람도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녹화사업 실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절실하다"며, 위원회 전체 차원의 인력투입과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규명위는 "개별 사건의 규명이 시급한데다, 위원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옳지 않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 이윤성씨 사망사건

현역입영 대상 안돼…시위직후 징집
월북시도 조작 드러나…구타 흔적도

의문사규명위가 당국의 은폐·조작 사실을 밝혀낸 이윤성씨 사망사건은 녹화사업이 얼마나 가혹했으며,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비극은 이씨 (당시 20살)가 성균관대에 재학중이던 1982년 11월3일 학생의 날 기념시위에 참가하면서 시작됐다. 이씨는 시위 직후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연행됐다가 곧바로 다음날인 11월4일 함께 붙잡힌 동료 학생 20명과 함께 강제징집돼, 최전방 부대인 5사단에 배치됐다. 신체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3대 독자인데다 시력이 나쁘고 아버지가 고령 (당시 61살)이어서 현역입대 대상이 아니란 사실은 아예 고려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군복무중 보안부대에 의해 정기적인 '순화교육'을 받았던 이씨는 전역을 열흘 가량 남겨둔 83년 4월30일, 제205보안부대 감찰실에 끌려갔고, 5월4일 새벽 3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당국은 "월북을 시도했던 이씨가 보안사 조사 도중 자책감과 불안감을 못이겨 목을 매 숨졌다"고 발표했다. 월북 시도 증거로 공개된 것은 이씨의 관물대에서 발견됐다는 불온유인물과 침학서적이 전부였다.

1남5녀 가운데 막내이자 외동아들의 죽음을 접한 이씨 부모는 충격으로 쓰러졌다. 어머니 박점선 (74)씨는 정신과 입원치료까지 받았고, 아버지 이명률씨도 화병을 앓다가 지난 4월 세상을 떠났다.

이씨의 사망 경위가 조작·은폐됐다는 사실은 그가 숨진 지 18년 만에 밝혀졌다. 당시 이씨를 직접 심문했던 보안사 요원들은 "월북 기도의 증거물로 공개했던 불온유인물 등도 조작된 것"이라고 증언했다. 가혹행위의 흔적도 발견됐다. 그러나 당시 관련자들이 가혹행위 등을 부인하고 있어, 이씨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이씨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녹화사업의 책임을 물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권력 최고위층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기 위해서다.

안수찬 기자

"의문사委 한계" 유가족 소송

"기관들 비협조로 진전없어"

한 의문사 유가족이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냈다.

출범 1주년이 지난 위원회의 불철저한 권한과 조사 의지에 대해 유가족이 반발한 것은 처음으로 앞으로 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3년 보안부대 조사 중 의문사한 이윤성씨(당시 21세)의 유가족 박모씨는 24일 "당시 이씨에게 주어졌던 월북 기도 혐의가 조작된 것이고 가혹 행위의 흔적이 발견됐지만 위원회가 권한이 미비해 더 이상 조사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유가족은 "위원회는 강제 징집과 관련한 의문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핵심적인 기초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지만 기무사 등 기관의 비협조에 아무런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사소송 절차상의 증인제도와 서증 제출명령, 석명권 행사 등 사법부의 권한에 희망을 걸고 사법부에 진상 규명을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성균관대에 재학 중이던 1982년 1월 학생의 날 시위에 참가했다가 강제 징집돼 다음해 5월 불온전단과 철학서적 등을 소지한 혐의로 보안부대에서 조사받던 중 의문사했다. 당시 군은 이씨가 월북 기도 혐의로 조사받던 중 자살했다고 발표했으나 위원회의 조사 결과 당시 월북 기도 혐의는 조작된 것이며 부검 과정에서 가혹 행위도 발견됐다.

박씨는 "위원회가 단지 자·타살 여부를 넘어 '녹화사업'이라는 정권 유지 공작 과정에서 어떻게 의문의 죽음이 계속됐는지 총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랐지만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진상 규명이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연대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이씨 등 현재 위원회가 조사 중인 5건의 군 의문사 사건뿐만 아니라 조사의 진전을 보지 못하는 다른 사건의 유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 특별법 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영수기자 nomad@kmib. co. kr

의문사유가족 국가상대 손배소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지난 83년 5월 보안부대에서 조사받다가 월북기도 혐의까지 받고 의문사한 이윤성(성균관대 81학번)씨 유가족이 24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유가족은 이날 오전 서울지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법의 미비점, 위원회의 한계 등으로 군의문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사법부의 권한과 민사소송절차상의 증인제도, 재판부의 석명권행사 등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진실규명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지난 83년 5월 보안부대에서 조사받다가 월북기도 혐의까지 받고 의문사한 이윤성(성균관대 81학번)씨 유가족 대리인인 박정관(故이윤성씨의 막내매형)씨가 24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뒤 서울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양승규)는 지난 80년대 운동권 학생들을 강제로 징집,군에서 순화교육을 시킨 이른바 '녹화사업' 관련 의문사 5건을 조사중이며, 특히 최근 최근 이씨 사건 조사과정에서 월북기도 혐의가 당시 보안사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을 확인해주는 일부 사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sungjin@yna.co.kr (끝)

5共 '녹화사업' 희생자 유족

국가상대 첫 손배訴

5공때 시위·집회 참가 대학생을 강제징집해 체제순응을 유도하고 프락치 활동을 하도록 한 '녹화사업'의 희생자 유족이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성균관대 재학 중 강제징집돼 1983년 5월 205 보안부대에서 불온유인물 소지 및 월북기도 혐의로 조사를 받다 의문사한 이윤성씨 유가족은 24일 서울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씨 유가족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법의 미비점, 위원회활동의 한계 등으로 군의문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사법부의 권한과 민사소송절차상의 증인제도, 재판부의 석명권 행사 등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80년대 운동권 학생들을 상대로 한 녹화사업과 관련, 의문사 5건을 조사중이며 최근 이씨 사건 조사과정에서 월북기도 혐의가 당시 보안사 감찰실의 지시에 의해 조작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이준호기자 juno@kyunghyang.com

軍의문사 유가족 국가상대 1억訴

제5공화국 정권 당시 운동권 대학생 등을 상대로 한 이른바 '녹화사업' 대상으로 강제징집돼 군에서 의문사한 희생자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법정싸움에 나섰다.

83년 월북을 기도한 혐의로 보안부대에서 조사를 받다가 의문사한 이윤성씨(성균관대 81학번)의 어머니 박모씨(72) 등은 24일 "재판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씨 등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법의 미비점과 관련기관의 비협조, 위원회의 한계 등으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더이상 위원회에만 의존할 수 없어 사법부에 도움을 요청하니 증인신문 등을 통해 진실을 밝혀 달라"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손배訴 2題

운동권 학생 軍의문死 유가족 국가에 1억소송

1983년 5월 강제징집 뒤 보안부대에서 불온 삐라 소지 이유로 조사받다 월북기도 혐의까지 받고 의문사한 이윤성(성균관대 81학번)씨 유가족은 24일 국가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씨 유가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법의 미비점, 위원회의 한계 등으로 군 의문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상현기자 shon@sgt.co.kr

군부대 조사중 의문사 이윤성씨 유족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1983년 5월 군 보안부대에서 조사받다가 의문사한 성균관대생 이윤성(당시 21살)씨 유가족은 24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씨 유가족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법의 미비점, 위원회의 한계 등으로 군의문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사법부의 권한과 민사소송 절차상의 증인제도, 재판부의 석명권 행사 등에 희망을 걸고 진실규명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또 '기무사 장병에게 드리는 부탁'의 글을 공개하고, "국가를 위한 충정은 군사독재 정권에 손과 발이 된 일부 잘못된 선배들의 과오를 무작정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 국민의 기무사로 거듭나게 하는 데 있다"며 "진실규명을 위한 진정한 용기와 지혜를 보여달라"고 밝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양승규)는 지난 80년대 운동권 학생들을 강제징집해 순화교육을 시킨 '녹화사업' 관련 의문사 5건을 조사 중이며, 최근 이 과정에서 당시 군 수사당국이 이윤성씨에게 월북기도 혐의를 덧씌우고 사건을 조작·은폐한 사실을 확인했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군 보안부대에서 조사를 받다가 의문사한 이윤성씨의 매형 박정관(맨 왼쪽) 씨가 24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에 앞서 법원 기자실에서 국가 배상의 당위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경신 기자 raoul@hani.co.kr

軍징집 의문사 유족 국가상대 첫 손배소

"진상규명위 진실 규명 한계"

5공 정권 당시 운동권 대학생 등을 강제징집해 특별정훈교육 명목으로 체제순응을 유도했던 '녹화사업'의 희생자 유족이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3년 5월 군 보안부대에서 조사를 받다가 월북기도 혐의까지 받고 의문사한 이윤성씨(성균관대 81학번) 유가족은 24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씨 유가족은 이날 오전 서울지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법의 미비점, 위원회의 한계 등으로 군 의문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의 불법적 행위는 공소시효에 의해 소멸될 수 없다는 사법부의 의견과 민사소송절차상의 증인제도, 재판부의 석명권 행사 등에 희망을 걸고 진실규명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동미기자
eyes@kdaily.com

83년 軍의문사 成大 이윤성씨

'녹화사업과정 사망' 확인

의문사委 "당시 수사관-보안부대장 진술"

프락치 강요 가혹행위도… 타살 가능성

강제징집 사망군인 6명중 첫 실체규명

1983년 5월 군복무중 보안사에서 월북기도 혐의로 조사를 받다 자책감을 못이겨 자살한 것으로 발표된 강제징집 사병 이윤성(당시 21세·성균관대2년휴학·사진)씨가 당시 군당국 발표와 달리, 운동권 출신 군인들에 대한 보안사의 녹화사업(일명 특별정훈교육) 과정에서 사망했으며 가혹행위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전역을 8일 앞두고 사망한 이씨가 녹화사업의 주요 프로그램이었던 '학원 프락치'를 강요받는 와중에 보안사에서 타살됐을 가능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5공초기 강제징집된뒤 의문사한 운동권 출신 군인 6명중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이씨가 처음으로 향후 다른 의문사 사건 실체규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는 21일 "당시 이씨를 조사했던 수사관들과 205보안부대장 등으로부터 이씨 연행 이유가 불온전단 소지와 월북기도 혐의가 아닌 운동권 출신들에 대한 보안사 주도 녹화사업 때문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의문사규명위 관계자는 또 "당시 보안사령부(현 기무사) 대공처 심사과 장교였던 최모(프랑스 거주)씨가 '1983년 2~3월쯤 보안사 심사과 분실에서 이씨가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군당국은 당시 '월북을 시도했던 이씨가 조사를 받다가 자책감을 못이겨 목을 매 숨졌으며,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발표했었다.

의문사규명위는 "보안사 관계자의 지시로 내가 (이씨가 소지했다는) 전단 발견자로 조작됐다"는 전직 보안부대원 유모씨 진술과 "당시 보안사령관 지시로 이뤄진 감찰에서 녹화사업 때문에 연행한 것임을 사실대로 밝혔다"는 이씨 수사관들의 증언도 확보했다. 군 상층부에서 이씨의 죽음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언이다.

의문사규명위는 당시 감찰조사를 담당했던 보안사 감찰실장 승모(호주 거주)씨와 대공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감찰결과 조작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동시에 "감찰조사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지난해 의문사규명위에 진술한 박준병 당시 보안사령관도 재조사할 계획이다.

의문사규명위는 이씨가 1983년 4월 30일 최초로 연행됐다는 당시 군 발표와 달리, 이전에도 수차례 보안부대에 불려갔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김홍남기자 utopian21@munhwa.co.kr

'녹화사업' 신군부 집권이전 계획

강제징집 대학생 증가

'의식화 사건' 빈발 따라

1980년대초 강제징집된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특별정훈교육이란 명분으로 실시된 보안사의 '녹화사업'은 신군부가 집권 이전부터 계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문사 진상규명위는 21일 "국방부가 1988년 국회 5공특위에 제출한 자료와 계엄사 관련자료 등에 따르면 신군부는 80년 1월 계엄사령부내에 자문위원회를 두고 정치·사회·학원 등 8개 분야 정책사항을 마련했으며, 학원대책 부분에서 '문제 학생은 구속, 입영 조처하라'는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의문사규명위는 "이들 자료에는 '문제 학생의 급격한 입대 증가로 군내 의식화 관련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이는 신군부가 강제징집된 학생들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녹화사업'을 계획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남기자

팔당인근 불법묘지 검찰 '원상복구 명령'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수사과는 21일 팔당상수원에 인접한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 야산에 불법 조성된 가묘 등으로 산림이 훼손된 2만8200㎡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검찰은 팔당주변 양평군 양서면과 수변구역인 가평·광주군에서 묘지와 전원주택을 불법 분양한 업자들도 수사할 계획이다. /의정부=오명근기자 omk@munhwa.co.kr

"軍 강제징집후 의문사 이윤성씨

녹화사업 과정서 사망"

진상규명위, 당시 수사관·부대장 진술확보

기무사 노동조직 내사등 민간사찰 지속의혹

1983년 5월 군복무 중 보안사에서 월북기도 혐의로 조사받던 도중 죄책감에 자살한 것으로 발표됐던 강제징집 사병 이윤성(당시 21세·사진)씨가 당시 군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보안사의 녹화사업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이 나왔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1일 "당시 이씨를 조사했던 당담수사관들과 205보안부대장 등으로부터 이씨의 연행 이유가 당시 발표한 것처럼 불온전단 소지와 월북기도 혐의가 아니라 운동권 출신들에 대한 보안사 주도의 녹화사업 때문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의문사규명위는 또 당시 보안사 대공처 심사과 장교였던 최모씨로부터 '1983년 2~3월쯤 보안사 심사과 분실에서 학생 한명이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확보, 구타를 당한 학생이 이씨인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씨는 성균관대 2학년에 재학중인 82년 11월 시위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뒤 곧바로 최전방 부대인 5사단에 강제징집됐다.

한편 의문사규명위는 92년 8월 실종된 뒤 의문사한 노동운동가 박태순(당시 27세)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당시 보안사(현 기무사)에 의해 집중적인 사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무사가 90년 이 부대 소속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 이후 민간인 사찰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한 뒤에도 민간인 사찰을 계속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의문사규명위는 박씨 사망사건을 조사한 결과 서울지역 보안사 방첩과 좌경계가 공작명 'XX사업'에 따라 박씨가 속한 노동운동 조직에 대해 내사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규명위 관계자는 또 "당시 보안사 요원들로부터 '윤이병의 양심선언 이후에도 사찰업무는 XX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진행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무사는 "기무사가 민간인에 대해 무조건적인 사찰을 자행하는 듯한 세간의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희균기자 belle@sgt.co.kr

83년 軍복무 의문사 成大生 사망전 '녹화사업' 조사받아

"월북기도 조사" 당시 발표와 달라

규명위, 보안부대 관계자 진술 확보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는 21일 83년 5월 월북기도 혐의로 조사를 받다 자살했다고 군 당국이 발표했던 이윤성(당시 21세·성균관대 휴학생)씨가 실제로는 '녹화사업'을 이유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녹화사업이란 80년대 신군부가 정권에 저항하는 대학생들을 군으로 보내 체제에 순응하도록 하는 일명 '특별정훈교육'이다.

진상규명위는 최근 당시 보안부대 관계자들로부터 "이씨를 연행한 것은 월북기도와 불온전단 소지 혐의가 아니라 녹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이씨가 조사 중 가혹행위로 사망했는지에 대한 증거와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무사가 지난 90년 10월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 이후에도 민간인 사찰을 계속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진상규명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2년 8월 의문사한 박태순(당시 27세)씨가 활동했던 노동운동 조직을 내사했던 당시 기무사 요원이 "91년 11월 박씨의 자취방 등에 대한 수색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기무사측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에 대한 일반적인 신원확인 절차였을 뿐 민간인 사찰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鄭佑相기자 imagine@chosun.com

83년 '군복무 자살' 성대생 '녹화사업'서 사망 밝혀져

의문死진상규명위 조사

1983년 5월 군 복무 중 자살한 것으로 군 수사기관에 의해 발표됐던 이윤성(당시 21세·성균관대 2년·사진)씨가 운동권 출신 대학생에 대한 '녹화사업'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는 21일 "당시 李씨를 조사했던 보안부대장 張모씨와 조사관 柳모씨 등으로부터 '李씨를 연행한 게 불온유인물 소지와 월북기도 혐의 때문이 아니라 보안사가 주도하는 정화교육인 녹화사업 때문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李씨 사망 직후 군은 "李씨가 불온서적 한 권과 북측이 유포한 삐라(안전보장증)를 소지하고 있던 것이 발각돼 관할 보안부대에서 월북기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자책감을 견디지 못해 군화 끈을 이용해 자살했다"고 발표했었다.

위원회 조사 결과 李씨는 83년 사망 전 수차례 보안부대에 연행됐으며, 李씨가 머물던 보안부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이 사병들에게 목격된 것으로 밝혀졌다. 위원회는 박준병 당시 보안사령관을 포함, 李씨 사건의 감찰조사를 담당했던 보안사와 대공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건 조작·은폐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현영 기자** <hypark@joongang.co.kr>

83년 軍의문사 成大 이윤성씨

'녹화사업'과정 사망 확인

부대원들 "보안사에 여러차례 불려갔다"
진상규명위 "軍수사결과 사실과 달라"

지난 83년 5월 월북기도 혐의로 보안사령부(현 기무사)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자책감을 못이겨 자살한 것으로 발표된 이윤성(당시 21세·성균관대 2학년 휴학)씨는 군 발표와는 달리, 운동권 출신 군인들에 대한 보안사의 녹화사업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21일 "당시 이씨를 조사한 보안사 조사관들과 205보안부대장 등이 이씨가 불온전단 소지와 월북기도 혐의가 아닌 운동권 출신 사병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녹화사업(특별정훈교육) 때문에 연행됐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또 "이씨가 사망 전에도 보안사에 여러 차례 불려갔었다는 당시 부대원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이씨 사망 뒤 보안사가 실시한 자체 감찰 조사에서 부대원들이 "이씨가 녹화사업 때문에 연행됐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위에 대해 박준병 당시 보안사령관 등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92년 8월 실종된 뒤 의문사한 박태순(당시 27세)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기무사의 집중적인 사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0년 10월 유석양 이병의 양심 선언 이후 "민간인 사찰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기무사의 대국민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진상규명위는 지난해 11월 기무사 요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91년 초 박씨의 동료였던 노동운동가 이모씨가 군에 입대하자 군내 좌경 세력 척결을 목적으로 시행되던 'A사업'에 의해 민간인 사찰이 진행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기무사는 "군 내부에 침투하는 간첩을 내사하면서 혐의자와 관련된 민간인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은 기무사 고유의 업무"라면서 "신원파악 외에 불법 사찰이 있었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 이창구기자 window2@kdaily.com

83년 軍의문사 成大 이윤성씨
당시수사관 "정훈교육중 사망"

운동권출신 군인 대상
'녹화사업' 과정서 참변

1983년 5월 군 복무 중 탈북 기도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다 죄책감에 자살한 것으로 당시 군당국이 밝힌 이윤성씨(당시 21세·성균관대 2년 휴학·사진)가 '녹화사업'(일명 특별정훈교육)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1일 "당시 205보안부대 관계자와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 수사관 등이 '이씨를 연행한 혐의는 탈북 기도나 불온 전단 소지가 아니라 녹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당시 이씨의 관물대에서 불온 전단을 발견한 것으로 언급된 보안부대원 유모씨도 전단을 발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위는 이씨가 운동권 출신 군인들에 대한 보안사의 녹화사업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과 이씨의 사인이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진상규명위는 당시 이 사건에 대한 감찰조사를 담당했던 보안사 감찰실 관계자와 대공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감찰 결과 조작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당시 이씨 사건에 대한 보안사의 감찰조사기록에 이씨의 연행 및 수사, 사망경위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찾고 있으나 현재 기무사의 존안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82년 11월 3일 학생의날 시위 도중 경찰에 연행돼 다음날 육군 5사단 소속의 최전방부대 중 한 곳으로 강제징집됐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기무사 92년에도 민간인 사찰

"90년 尹이병 양심선언후 내사" 진술 확보

의문사진상규명委 밝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1990년 10월 당시 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윤석양 이병의 양심 선언 이후에도 민간인 사찰을 계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92년 8월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박태순씨(당시 27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무사가 박씨를 사찰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91년 초 당시 기무사 요원이 박씨의 동료였던 노동운동가 이모씨가 군에 입대하자 군내 좌경세력 척결을 목적으로 시작된 모 '사업'의 일환으로 박씨와 박씨가 속했던 노동운동 조직에 대한 내사를 펼쳤다고 지난해 11월 진술했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기무사는 91년 11월 박씨와 박씨의 여자선배 자취방까지 수색하고 비디오 및 사진 채증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기무사 관계자는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던 이씨에 대해 내사하던 중 그와 관련된 박씨를 비롯한 민간인들에 대해서 통상적인 신원확인을 한 것일 뿐 사찰을 한 적은 없다"며 "기무사는 신원확인 결과 민간인으로 확인되면 즉시 경찰이나 국가정보원 등에 넘긴다"고 말했다.

박씨는 한신대를 중퇴하고 87년부터 수원지역 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92년 8월 서울 구로역 부근에서 실종됐으나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 실종 당일 국철 시흥역 구내 하행선 철로에서 숨진 채 발견돼 행려 사망자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83년 강제징집후 의문사 이윤성씨

'녹화사업'중 사망

"월북기도 혐의 사실무근… 가혹 행위 목격"
의문사위, 수사관·보안사관계자 진술 확보

강제징집으로 군복무 중 1983년 5월 보안사에 연행된 후 의문사 한 이윤성(당시 21세·사진)씨가 조사도중 자책감을 못이겨 자살했다는 발표와는 달리 보안사의 '녹화사업' 과정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는 21일 "당시 이씨를 조사했던 수사관들과 보안부대장으로부터 이씨 연행이 월북기도 혐의가 아닌 운동권 출신들에 대한 녹화사업 때문이었으며 이씨 소지품에서 불온 전단이 발견됐다는 것도 이씨 사망 후 조작한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또 당시 보안사령부 대공처 장교였던 최 모(프랑스 거주)씨가 "83년 2월께 보안사 심사과 분실에서 이씨로 보이는 사람이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씨가 녹화사업 주요 프로그램이었던 '학원 프락치'를 강요받다 보안사에서 타살됐을 가능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5공초 강제징집 후 의문사한 6명 중 사망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이씨가 처음으로 향후 다른 의문사 사건 진실규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규명위는 당시 사건을 감찰했던 보안사 감찰실장 승모(호주 거주)씨와 대공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감찰결과 조작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박준병 당시 보안사령관도 재조사할 계획이다.

이씨는 성균관대 재학 중인 82년 11월 시위에 참가했다 연행된 뒤 곧바로 최전방부대인 5사단에 강제 징집됐으며, 83년 5월4일 보안부대에 연행돼 조사 받던 중 목맨 변사체로 발견됐다.

당시 군당국은 "이씨가 월북기도 혐의로 조사를 받다 자책감을 못이겨 자살했으며 조사과정에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83년 軍의문사 成大 이윤성씨

'녹화사업과정 사망' 확인

규명委 "당시 부대장 진술"

1983년 5월 군복무 중 보안사에서 월북기도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의문사한 이윤성씨(당시 21세·성균관대 2년 휴학)가 "자책감을 못이겨 자살했다"는 당초 군발표와 달리 운동권 출신 군인들에 대한 보안사의 '녹화사업'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1일 "당시 이씨를 조사한 수사관과 205보안부대장 등으로부터 '이씨 연행 사유는 불온전단 소지와 월북기도 혐의가 아니라 보안사의 녹화사업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또 "당시 보안사 대공처 심사과 최모 중위로부터 '83년 2~3월 보안사 심사과 분실에서 학생 한명이 가혹 행위를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받아냈다"고 밝혀 가혹행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규명위는 그러나 "그 학생이 이씨인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jbravo@kyunghyang.com

"이윤성씨 사망전 운동권 친구 만나"

시민단체, '프락치 활동' 강요 증거 … 의문사위에 제보

송화선 기자 hsahn@naeil.com

'1983년 군복무중 월북기도 혐의로 보안사의 조사를 받다 자책감을 못이겨 자살한 것으로 발표된 이윤성(당시 21세 · 성대 2년 휴학)씨가 사망 한 달전쯤 식구들 몰래 운동권 친구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씨가 당시 보안사의 녹화사업 과정에서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다 희생됐을 가능성이 다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씨의 같은 과 친구였던 최 모(41 · 성대 사학과 졸업)씨는 29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씨가 사망 한 달 전인 83년 3월말에서 4월초께 학교로 찾아와 '써클은 잘 되냐' '다들 뭐하냐'는 등 안부를 묻다 '누굴 또 만나야 한다'며 바삐 자리를 떴다"며 "당시 같은 과 친구였지만 별로 친하지 않아 왜 나를 찾아왔을까 의아해했다"고 증언했다.

또 최씨는 "당시 이씨의 표정이 매우 밝아 한달 후 자살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며 "이씨를 만난 술집은 그 무렵 항상 운동권 학생들로 붐볐던 곳"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씨의 매형 박정관씨는 "이씨는 시위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돼 강제징집 당한 후 한 번도 집으로 휴가를 나온 적이 없다"며 "당시 학교와 집이 1시간 거리밖에 안됐는데 친구들만 만나고 부대로 돌아갔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이은경 사무처장도 "이씨의 휴가는 가족조차 전혀 몰랐던 사실인 만큼 정상적인 휴가가 아니라 보안사의 강요에 의한 '프락치 활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의 증언을 바로 위원회측에 제보했다.

한겨레 2002. 2. 22

강제징집 의문사 이윤성씨 군 '녹화사업' 과정서 숨져

당시 군수사관 규명위 증언

1983년 강제징집당해 군복무 중 의문사한 이윤성(당시 21살·성균관대2년 휴학)씨는 '월북기도 혐의로 조사받던 중 자책감에 못이겨 자살했다'는 당시 군 발표와 달리 '녹화사업'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는 21일 "당시 이씨를 조사했던 군 수사관 등으로부터 이씨를 연행한 것이 월북기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게 아니라 '녹화사업' 때문이었으며, 이씨는 83년 5월 숨지기 전에도 여러차례 205보안부대에 불려갔다는 진술을 최근 받아냈다"고 밝혔다. 당시 이씨의 동향을 감시해 온 205보안부대 관계자는 "숨질 당시 이씨의 소지품에서 불온전단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규명위 쪽은 전했다.

규명위 관계자는 "당시 보안부대 관계자는 이씨가 숨진 직후 실시된 보안사 자체 감찰조사에서 '녹화사업 때문에 이씨를 연행했다'는 말을 들었으며, 이 조사에서 불온전단 내용은 일절 언급한 일이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씨가 숨진 당일 박준병 당시 보안사령관이 직접 감찰조사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관련자들한테서 받아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규명위는 이씨가 당시 녹화사업의 주요내용인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는 과정에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당시 이씨 소속 부대장과 보안사 관계자 등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한겨레 2002. 4. 30

강제징집 이윤성씨 '프락치' 강요당한듯

의문사 한달전 과 친구 접촉

강제 징집을 당한 뒤, 1983년 5월 보안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윤성(당시 21살)씨가 운동권 학생들을 통해 운동권 동향을 파악하게끔 하는 이른바 '녹화사업' 과정에서 망원(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윤성씨의 성균관대 사학과 동기 최아무개(41)씨는 29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성이가 죽기 한달 전쯤 학교 앞 술집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다"며 "친한 사이도 아닌데 내가 속한 동아리 사람들의 안부를 물어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군 조사 기록에는 이씨가 사망 직전까지 휴가를 나온 사실이 없으며, 가족들도 휴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82년 11월 강제 징집된 이윤성씨는 83년 5월4일 숨졌다.

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

문용섭 사건 관련 보도

2002. 5. 1 문화일보

88년 의문사 문용섭씨 구사대 폭력으로 사망

경찰과 유착 은폐의혹도 의문사 진상규명위 밝혀

지난 1988년 노조활동을 벌이다 의문사한 광무택시㈜ 노조원 문용섭씨는 회사가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한 '구사대'의 폭력에 의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1일 "사건 당일 회사 관계자가 '문씨가 회사비리를 폭로한다고 떠드니 정리 좀 해달라'고 전화를 했었다는 신모씨의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회사측이 동원한 구사대의 폭력행사 과정에서 문씨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신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경찰간부로부터 '걱정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혀 회사측이 경찰과 유착,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노윤정기자 prufrock@munhwa.co.kr

2002. 5. 1 國民日報

'구사대 청부폭력' 양심선언

1988년 동료 직원에게 포장마차에서 폭행당해 숨진 광무택시 노조원 문용섭씨(사망 당시 47세)는 회사측의 사주를 받은 구사대원의 청부폭력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1일 노동절을 맞아 문씨 사건 등에 대한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가해자 신모씨의 양심선언 내용을 공개했다.

강영수기자 nomad@kmib.co.kr

2002. 5. 2 한국일보

88년 문용섭씨 의문死 구사대 개입 밝혀져

1988년 6월 단순폭행·과실치사로 수사가 종결됐던 서울 면목동 ㈜광무택시 노동자 문용섭(당시 47세)씨 의문사와 관련, 사측에서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조직했던 이른바 구사대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1일 중간발표를 통해 "문씨를 폭행, 사망에 이르게 했던 가해자들로부터 '사건 당일 회사 관리부장으로부터 문씨를 정리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범행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river@hk.co.kr

2002. 5. 2 한겨레

88년 문용섭씨 사망에 구사대 개입 진술확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988년 숨진 광무택시 노조원 문용섭(당시 47살)씨와 후지카대원전기 노동자 오범근(당시 37살)씨 사건에 회사쪽이 동원한 구사대가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1일 밝혔다.

규명위는 이날 "'문용섭이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하니 정리해 달라'는 회사 간부의 전화를 받았다는 당시 구사대 신아무개씨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 전화를 받고 달려간 신씨가 폭력을 휘둘러 문씨가 숨졌으나 경찰은 단순 과실치사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규명위는 설명했다.

신윤동욱 기자

노동일보 2002. 5. 1

88년 의문사한 노동자 문용섭씨 구사대 개입 확인

검·경찰 축소·은폐 의혹

의문사진상규명위, 가해자 양심선언 공개
용역경비 폭력 근절 대책 마련해야

노동조합 탄압을 위해 사측이 구사대를 고용, 노조활동에 적극적이던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이 정부기관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찰과 경찰이 당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가해자의 양심선언을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효성·레미콘·시그네틱스 등 노동현장에서 용역경비에 의한 폭력사태가 빈발하고 있고 회사·경찰과의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용역경비(구사대)의 폭력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지난 1988년 (주)광무택시에서 노조 활동을 벌이다 의문사한 문용섭씨 사건의 조사결과를 1일 발표했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당시 구사대로 활동했던 신모씨는 "소년원에서 알게된 친구를 통해 '노조 때문에 골치가 아프니 도와달라'는 회사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입사했다"고 양심 선언했다.

신모씨는 지난 88년 6월6일 문씨 폭행사건 당시 "회사 관계자가 '문씨가 회사비리를 폭로한다고 떠드니 정리 좀 해달라'고 전화를 했었다"고 폭로했다.

문씨는 사건 당일 회사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회사측 사람들과 언쟁을 벌인 뒤 인근 포장마차에서 구사대로 활동하던 신모씨에게 얼굴을 가격 당하고 3일이 지난 6월9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자신이 전과가 많아서 폭행치사로 구속될 경우 파렴치범으로 대접받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배도 피고 커피도 마시면서 호의적으로 조사 받았다고 진술했다.

특히 신씨의 담당 수사 과장은 '걱정 말라'며 상당한 호의를 베풀었고 구사대의 폭력을 사주한 사측 관계자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이 노동자 관련 의문사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은 88년 3월 후지카 대원전기(주)에서 음독 사망한 오범근씨 사건에서도 확인됐다.

진상규명위는 "오씨의 경우 구사대가 파업 농성자들을 폭력으로 진압한 데 항의, 음독 사망했는데도 검·경은 '신병을 비관한 음독'으로 판단, 사건의 본질이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2면으로 이어짐

/류정민 기자 dongack@laborw.com

검·경찰 축소·은폐 의혹 충격

▶1면에서 이어짐

당시 구사대의 폭력진압이 회사측과 어용노조간의 '합작품'이었음에도 검·경은 이 사건을 '노노 갈등'으로 몰고 가 회사 관계자들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규명위는 "사측 관계자들의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고의로 은폐·묵인했던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려던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윤희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업국장은 "진상규명위의 조사를 통해 구사대 폭력 행위의 실태가 드러난 만큼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문사 가운데 구사대로 인해 노동자가 죽음에 이른 사실이 밝혀진 것은 진상규명위 조사 이후 처음이다.

/류정민 기자 dongack@laborw.com

권노갑씨 소환, 돈수수 경위 추궁

내일 사법처리 결정…경선자금도 수사

의문사 규명위 출범 1년 관련 보도

의문사진상규명위 출범1년

'최종길교수 사건' 등 성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梁承圭)가 18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위원회는 70, 80년대 의문사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이 400여일 간 국회 앞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10여년에 걸친 눈물겨운 활동을 통해 지난해 1월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졌다.

조사대상 83건중 13건 결론내려

강제 수사권 없고 시한 촉박 '걸림돌'

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2월. 1969년 3선 개헌 이후 민주화운동과 관련, 공권력의 위법행위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의문사 83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과는 73년 중앙정보부의 조사를 받던 중 투신자살한 것으로 발표돼 의문사 1호로 꼽히는 최종길 서울대 법대교수의 간첩혐의가 당국에 의해 조작됐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

위원회는 또 지난 84년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 고문사 한 박영두사건과 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보안사 조사 중 사망한 임기윤 목사 사건 등 2건을 민주화 관련 타살로 인정했다. 9건은 자살이나 단순사고사인 것으로 밝혀져 기각됐으며, 1건은 진정인 스스로 취하했다.

또 '처벌보다 진실'이라는 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5·18 광주민주항쟁 당시 진압군이었던 공수부대원이 무고한 시민을 사살해 암매장했다고 진실을 털어 놓는가 하면, 경찰의 프락치 공작에 휘말려 운동권 선배를 넘겨준 대학 후배가 '양심고백'을 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나머지 70여건에 대해 결론을 내놓아야 하는 시한에 쫓기고 있다.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점도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조사대상이 동행명령장에 불응해도 기껏해야 과태료 최고 1,000만원을 부과하는 것 외에 뾰족한 처벌수단이 없다. 실제 97년 당시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아파트에서 떨어져 폭행당해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준배 사건의 당시 담당검사가 소환에 불응하는 등 공안·정보기관들이 비 협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위원회의 주장이다.

/정영오기자young5@hk.co.kr

의문사 규명委 출범 1년

83건중 11건 마무리… 남은 기한 촉박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발족한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梁承圭)가 18일 출범 1주년을 맞았다.

1970, 80년대 억울한 죽음을 당한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10여년간 진상규명을 요구해옴에 따라 99년 12월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이를 근거로 지난해 10월 9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됐다.

공권력탓 사망 2건 밝혀

이 위원회는 1969년 박정희 군사정권의 3선개헌 이후 이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 전신), 군, 경찰 등 공권력의 위법한 개입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의문사 사건 78건을 접수하고 직권으로 조사 결정을 한 5건을 합쳐 모두 83건에 대해 올 2월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이중 84년 10월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 의문사한 박영두사건, 80년 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 연루돼 국군보안사령부(기무사령부 전신) 부산분실에서 조사받던 중 의문사한 임기윤사건 등 2건만이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됐다. 9건은 자살이나 단순사고로 밝혀져 기각되고 1건은 진정인이 취하했다.

이로써 83건 중 11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됐다.

성과가 저조한 이유는 위원회 자체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위원회는 강제수사권이 없고, 조사대상자의 신병을 장기간 확보해 조사할 수도 없다.

또한 조사대상자를 소환할 때도 법적 구속력이 거의 없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도 많다.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동행명령장 발부가 전부.

하지만 이에 불응해도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는 실정이다.

위원회는 이같은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도 여러차례 숨겨진 진실을 밝혀냈다. 1973년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로서 중앙정보부의 조사를 받던 중 투신자살한 것으로 발표돼 의문사 1호로 꼽히는 최종길 교수사건과 관련해 위원회는 최 교수의 간첩혐의가 당국에 의해 조작된 것임을 밝혀냈다. 최 교수의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사가 진행중이다.

최종길교수 간첩조작 드러나

위원회는 또 80년 5·18 광주민주항쟁 당시 진압군이던 공수부대원이 무고한 시민을 사살해 암매장했다는 사실과 90년대 학내 프락치공작의 실체도 밝혀냈다.

양 위원장은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통해 잘못된 과거사를 반성하고 보다 투명한 사회에서 국민 모두가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특별법 규정상 내년 2월까지는 나머지 의문사 사건 70여건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놓아야 한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출범 1년 의문사규명委

최종길교수 간첩누명 등 벗겨

조사대상 83건 중 12건만 끝내

"시간과 싸운 1년이었습니다."

17일로 출범 1주년을 맞은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梁承圭) 직원 80여명의 공통된 회고다.

지난해 10월 3선 개헌(1969년) 이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 행위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들의 진상 규명을 위해 출범한 위원회는 유가족의 진정과 자체 검토를 통해 조사대상 83건을 확정하고 활동을 벌여왔다.

지금까지 조사가 완결된 사건은 12건. 이 중 84년 청송교도소에서 숨진 박영두(당시 25세)씨 사건 등 2건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타살임을 밝혀냈다.

특히 73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던 중 투신자살해 '의문사 1호'로 꼽히는 서울대 최종길(당시 42세)교수의 간첩 혐의가 수사 당국에 의해 조작됐다는 사실을 밝혀낸 일은 수사요원과 민간조사관 50명이 끈질긴 노력 끝에 일궈낸 쾌거였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모두 20~30년 된 사건이다보니 사건 현장은 물론 관련 기록들도 전무한 경우가 많다"며 "한 사건의 조사를 위해 최고 90명의 사람을 만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梁위원장은 격무에 시달리는 조사관들을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작업인 만큼 소명의식을 갖고 조사에 임하라"며 독려해왔다.

하지만 '숨겨진'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다보니 조사가 완결된 사건이 전체 조사 대상의 10% 선에 머무르는 등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97년 숨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당시 26세)씨 사건 조사 과정에서 담당검사가 소환에 불응했을 땐 "수사권을 주든지 조사 불응자에 대한 처벌이라도 강화해 달라"는 조사관들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梁위원장은 "자신의 과오를 떳떳하게 밝히는 정직함이 아쉽다"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정직한 자기 반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활동 기간을 두 차례 연장, 내년 3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할일 산적… 위상강화·내부개혁 필요

의문사규명위 출범 1년

83건중 11건 마무리

성과 올리기 집착속

권한 미약 한계봉착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가 17일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위원회는 그동안의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내부개혁과 위상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그동안 진정을 받거나 직권조사를 결정한 83건 의문사 중 11건을 사건 종결처리했다. 이중 민주화 관련 의문사로 인정된 것은 청송감호소 수감 중 고문과 구타로 사망한 박영두씨와 보안부대에서 조사받은 뒤 병원에서 숨진 임기윤씨 사건 등 2건. 나머지 9건은 단순사고사나 자살로 밝혀져 기각되거나 진정취하됐다. 위원회는 이밖에 지난 97년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것으로 발표됐던 광주대생 김준배씨가 추락당시 경찰관에게 구타당한 사실을 확인했고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가 간첩자백을 했다는 당시 중앙정보부의 수사결과가 허위라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내는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6개월 동안 70여건의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위원회가 조사권한이 미비할 뿐 아니라 진상규명 의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문사 유가족 등 민간단체들과 위원회 일부 조사관들은 최근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위원회가 녹화사업과 프락치공작, 공권력의 사건은폐조작 등 반인권적 과거 청산이라는 본질적인 임무를 방기한 채 개별사건의 자·타살 여부만 중시하고 있다"며 "특히 사회적 관심이 높은 몇 가지 사건에만 집중하는 성과주의가 팽배해 있다"고 비판했다.

임기윤씨 사건은 보안부대 조사과정에서의 폭력 의혹이 전혀 규명되지 않은 채 조기종결됐고 지난 87년 군에서 의문사한 정연관씨 사건도 당시 보안부대의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없이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3년 군의문사한 이윤성씨(당시 21세) 사건은 당시 보안사의 감찰기록 등 관련자료는커녕 자료목록마저 제출거부된 상태다.

한 유가족은 "녹화사업 조사를 위한 문서목록마저 군사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이 거부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임에도 위원회는 자료확보와 조사를 위한 어떤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위원회 한 조사관은 "위원회 권한이 미약해 공권력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한계에 봉착했다"며 "내부개혁과 특별법 개정을 통해 조사권한과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영수기자

<출범1주년 맞는 의문사진상규명위>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군사독재 치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의문사의 진실을 캐기 위해 발족한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가 18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한 위원회는 주로 지난 70, 80년대의 의문사 유가족들이 400여일간의 국회앞 천막농성을 비롯한 10여년에 걸친 눈물겨운 활동으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돼 생겨났다.

위원회는 지난 69년 박정희 군사정권하의 3선개헌 이후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중앙정보부, 군, 경찰 등 공권력의 위법행위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의문사 사건들에 대한 진정을 접수, 혹은 직권으로 조사 결정을 내려 모두 83건에 대해 지난 2월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이중 지금까지 지난 84년 청송교도소에 수감중 의문사한 박영두사건 등 2건이 민주화 관련 타살로 인정되고 9건이 자살이나 단순사고사인 것으로 밝혀져 기각됐으며 1건은 진정인 스스로 취하했다.

출범 1주년을 맞도록 아직 성과물이 조사대상의 10%선에 지나지 않은 것은 대부분의 의문사 사건이 20, 30년전의 것인데다 무엇보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위원회 권한 자체의 한계 때문이다.

위원회는 그럼에도 불구, 지난 73년 당시 서울대 법대교수로서 중앙정보부의 조사를 받던중 투신자살한 것으로 발표돼 의문사 1호로 꼽히는 최종길 교수사건과 관련, 최교수의 간첩혐의가 당국에 의해 조작된 것임을 밝혀내는 성과를 얻어냈다.

또 행방불명된지 약 10년만에 실종된 노동운동가와 운동권 학생의 시신을 무연고 묘지에서 발굴해내고 일부 군관련 사망사건이 단순 사고사임에도 문책을 두려워한 군당국에 의해 조사가 왜곡돼 발표된 것임을 밝혀내기도했다.

아울러 `처벌보다 진실'이라는 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5.18 광주민주항쟁 당시 진압군이었던 공수부대원이 무고한 시민을 사살해 암매장했다고 진실을 털어놓는가 하면 90년대 들어서도 경찰의 프락치 공작에 휘말려 운동권 선배를 넘겨준 대학 후배가 익명이라는 조건이 붙긴했지만 `양심고백'을 하기도했다.

하지만 조사대상인 관계기관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난 97년 당시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아파트에서 떨어져 구타속에 숨진것으로 알려진 김준배 사건의 담당검사가 위원회의 소환에 불응하는 것을 비롯, 검찰과 기무사등 공안·정보기관들의 협조가 여전히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위원회로서는 조사대상이 동행명령장에 불응해도 기껏해야 과태료 최고 1천만원을 부과하는 것외에 현실적으로 달리 뾰족한 처벌수단이 없다.

위원회는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조사기한을 기본 6개월외에 추가로 최장 6개월까지 연장시키긴 했지만 길어도 내년 2월 무렵까지는 나머지 의문사 70여건에 대한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

위원회 사무실에 걸려있는 `감춰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다'는 성경 구절처럼 어둠속에 숨져간 이들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열매를 맺을지 주목된다.

sungjin@yna.co.kr

(끝)

탁은주 사건 관련 보도

2001. 10. 12 國民日報

10년전 의문사 여대생 무연고 묘지 매장 확인

당시 신원불명으로 처리

1991년 행방불명됐던 운동권 출신 여대생 탁은주씨(당시 20세·창원대 교육학과)가 신원불명 사망자로 처리돼 무연고 묘지에 매장된 사실이 10년만에 밝혀졌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12일 "탁씨의 의문사 사건 조사를 위해 그해 12월 10일 이후 발견된 신원불명의 여자 변사자 268명을 조사한 결과 1992년 1월21일 부산 봉림동 낙동강변에서 발견된 변사자가 탁씨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발견 당시 변사체는 부패 정도가 심해 신원불명으로 처리돼 부산 두구동 부산법의감정위원회 내 무연고 사망자 묘역에 매장됐다"며 "탁씨의 유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조사결과 시계 등 소지품과 복장이 탁씨의 것임을 확인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감식을 의뢰, 지난 10일 변사자와 탁씨가 동일인임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추적 끝에 행방불명된 의문사 시신이 발견된 것은 지난 2월 노동운동가 박태순씨 이후 두번째다.

탁씨는 1991년 창원대 동아리인 참교육회 회장직을 맡아 강경대군 장례식에 참가하는 등 민주화투쟁을 해오다 그해 12월10일 해직교사 원상복직과 전교조 합법성 쟁취 관련 행사에 참석한 뒤 행방불명됐다.

강영수기자 nomad@kmib.co.kr

2001. 10. 13 한국일보

실종 10년만에 여대생 시신 확인

의문사 규명委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梁承圭)는 1991년 12월 실종됐던 창원대 교육학과 2년생 탁은주(卓銀珠·여·당시 19세)씨의 시신을 찾았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탁씨의 변사체로 추정되는 시신을 8월30일 부산 금정구 '부산 법의감정위원회'내 무연고 사망자 묘역에서 발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결과, 변사자가 탁씨와 동일인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탁씨가 실종직전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학내 동아리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 편지의 소인이 찍힌 부산 강동구 일대 변사처리자를 탐문해 탁씨의 시신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탁씨가 당시 학생운동 전력에다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 및 합법성 쟁취 등의 행사 참석 후 실종됐다는 주변의 진술과 함께 탁씨의 마지막 편지에 '세상과의 모순을 극복해갈 수 없는 자신이 싫었다…. 세상과 타협하기 싫다'고 쓰인점 등을 고려, 자·타살 및 사고사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정영오기자young5@hk.co.kr

최종길교수 사건 관련 보도

東亞日報 2001. 10. 13

의문의 실종 여대생 10년만에 사망 확인

의문사진상규명위 밝혀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梁承圭)는 유전자 감식을 통해 91년 12월 창원대 교육학과 2학년에 재학 중 실종된 탁은주(卓銀珠·여)씨의 사망 사실을 10년 만에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상규명위원회 문덕형(文德炯) 상임위원은 이날 "실종된 탁씨의 변시체로 추정되는 유해를 8월 부산 금정구 소재 무연고 사망자 묘역에서 발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결과 변사자가 탁씨와 동일인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경찰청 및 낙동강변 관할 경찰서를 상대로 신원 미상의 20대 여자 변시체 처리기록을 샅샅이 뒤진 결과 92년 1월 부산 강서구 봉림동 서낙동강 강변에서 50여m 떨어진 수면 위로 떠오른 여자 변시체가 실종 당시 탁씨의 인상착의와 비슷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유해를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한겨레 2001. 10. 13

91년 실종 여대생 사망 확인

의문사규명위, 창원대 탁은주씨 유해 감식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12일 "1991년 12월 실종된 창원대 교육학과 2학년 탁은주(당시 19살)씨의 사망 사실을 10년 만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원회는 "행방불명자 탁씨의 변사체로 추정되는 유해를 지난 8월30일 부산시 법의감정위원회 내부의 무연고 사망자 묘역에서 발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결과 변사자가 탁씨와 동일인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탁씨가 실종 직후 학내 동아리 앞으로 부산시 강동우체국 소인이 찍힌 편지를 보내온 사실에 주목해 이 지역 주변 경찰서를 상대로 당시 신원 미상의 20대 여자 변사체 처리과정을 조사한 결과, 지난 92년 1월21일 부산시 강서구 봉림동 낙동강변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탁씨의 인상착의와 비슷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위원회는 탁씨가 당시 학생운동에 참여했고,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을 촉구하는 행사에 참석한 직후 실종됐다는 유족의 진술과, 탁씨가 학내 동아리에 보낸 편지에 "세상과의 모순을 극복할 수 없는 자신이 싫었다…세상과 타협하기 싫다"고 쓴 점 등을 감안해, 타살과 자살의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안수찬 기자

2001. 10. 19 경향신문

'최종길교수 고문' 확인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투신 사체사진등 첫 공개

대통령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1973년 10월 중앙정보부에서 추락사한 것으로 발표된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에게 혹독한 고문이 자행된 것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당시 최교수를 조사한 수사관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최교수는 연행된 다음날인 10월17일에서 18일 사이 손과 발을 이용한 폭행, 몽둥이를 사용한 흑심한 구타, 통닭구이 고문 등이 자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다른 종류의 고문이 자행됐다는 제보를 토대로 고문에 대한 추적 및 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최교수의 사인이 고문이 직접적인 원인이냐, 간접적인 원인이냐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문이 사망과 관련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날 최교수의 사체 현장사진을 최초로 공개하면서 ▲중앙정보부에서 73년 작성한 현장검증 문서에는 10월19일 새벽 4시30분~5시 사이로 돼 있지만 이 시간에 남산분실에서 현장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추락한 사체의 자세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부자연스러운 점 ▲사체의 머리부분에 있는 혈흔을 법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현장검증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 사건을 은폐·조작한 입안자와 지휘라인 등에 대해 조작의 동기와 정치적 함의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회복기자 wonhb@kyunghyang.com

2001. 10. 19 중앙일보

"최종길교수 사건 中情서 조작"

당시 현장검증 사진공개 "머리출혈 기록과 달라"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혐의로 조사 받다 숨진 최종길(崔鍾吉)전 서울대 법대교수의 28주기를 맞아 의문사진상규명위가 당시 정보부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며 현장검증 사진 두장을 18일 공개했다.

의문사위 김형태(金亨泰)상임위원은 이날 "당시 현장검증 문서에 따르면 사진촬영 시점이 그해 10월 19일 오전 4시30분~5시로 돼 있지만 조사 결과 이 시간에는 남산분실에서 현장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金위원은 또 "현장사진에는 崔교수의 머리부분에 다량의 혈흔이 있지만 당시 부검감정서에는 '머리에는 파열창이 없다'고 돼 있어 현장검증과 부검 모두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崔교수 간첩조작의 실체 및 지휘라인이 상당부분 밝혀졌으며 당시 고문수사관이 누구였는지도 알아냈다고 중간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대 근대법학 백주년기념관에서는 '최종길 교수를 추모하는 사람들의 모임'(대표 李壽成 전 총리)주최로 아들 최광준 경희대 법대교수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제가 열렸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